



04 • 권두언

세종시 출범, 충남도와 상생을 꿈꾸다 | 김용웅

06 • 특집 | 세종시 출범과 충청권 동반성장

충청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방안 | 오용준

세종시와 연계한 공주시 상생발전방안 | 정한영 외

세종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 장철순

25 • 충남논단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입지에 따른 환경영향과 향후 전망

| 정종관

효율적인 충남형 빗물관리 방안 | 오혜정

48 • 충남 마을 기행

아름다운 언덕, 청양가파마을 | 정봉희

53 • 열린마당

언론을 통해 본 충남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과제 | 신상구

62 • 해외리포트

사람이 창조한 사람의 땅, 네덜란드 | 권영현

70 • 오피니언

충남 표심과 정치 발전 | 김경숙

꽃처럼 꿀벌처럼 | 성기훈

75 • 충남 소식

78 • 연구원 소식

83 • 충남 문화유산

노강서원

세종시 출범, 충청도와 상생을 꿈꾸다

김용웅 |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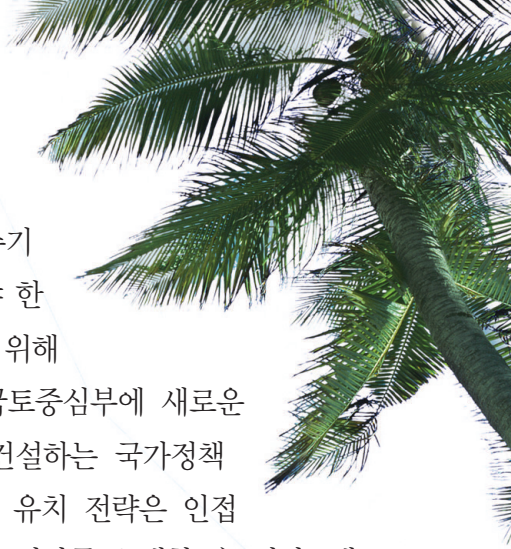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공식 출범한다. 올해는 충청남도가 독립적인 지방행정단위로 탄생한지 116주년, 그리고 대전시가 충청남도로부터 분리 독립한지 23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종시의 출범은 충청남도의 도 행정은 물론 지역주민생활과 경제-사회발전에도 많은 충격과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기능과 공간의 변화 없는 지방행정구역의 인위적 분리는 주민생활의 불편과 경제-사회적 활동에도 장애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 간 상생협력은 정책적 당위성이나 정치적 의지의 표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 간 협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행정제도와 관행, 지역주민과 경제주체의 인식과 문화 및 행·재정적 지원제도와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상생과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과 핵심과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 인접지역 상호간 산업, 경제, 문화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역할분담 없이 새로운 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 주변지역 간에는 불필요한 개발경쟁과 경합이 증대되어 막대한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대도시권을 형성하려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세종시는 수도권의 경제 및 사회부문의 다양한 중추기능과 기관을 유치하는 수요창출형 도시조성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세종시는 충청권내 부족한 주택 및 도시개발수요 충족을 위해 건설하는 도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중심부에 새로운 국가발전 거점을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국가정책 차원의 신도시이다. 아파트 일반분양을 통한 주변지역인구의 유치 전략은 인접 지역의 공동화와 함께 세종시 자족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이전과 함께 국공립금융기관 본사, 대기업 본사, 전국단위 언론사 등 다양한 부문의 중추관리 기관과 국가적 선도 산업을 병행 유치해야 한다. 세종시 조성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세종시와 주변도시 간 예상되는 도시시설 및 서비스수준의 극심한 격차현상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를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기술의 세계적 수준의 모델도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에는 심각한 발전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세종시와 주변도시 간 심각한 격차의 해소 없이는 상호 수평적인 연계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세종시와 주변 도시의 격차해소는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앞으로 만들어 갈 미래도시이다. 따라서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방안은 도시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세종시 출범 초기단계에는 정부기관과 이전가족의 정착, 경제-사회중추기관과 기업의 유치 등 세종시의 자족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치중하고, 안정 및 성숙단계에 맞추어 상호보완과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자족적 성장기반이 마련되어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와 상생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세종시를 포함한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기반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와 상생협력은 충청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리더십의 발휘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세종시와 상생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충청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방안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왜 상생발전이 필요한가

세종시는 16개의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과 20개의 소속기관이 이전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조성된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12년 7월 1일자로 연기군(약 82,000명, 361km²)과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 일부지역(약 5,700명, 77km²)이 세종시로 편입(약 88,000명, 438km²)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공동화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건설되면 다양한 기회요인, 잠재력, 위협요인 등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호보완하고 연계해서 세종시와 주변 시·군이 동반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청남도가 세종시와 공생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종시와 주변지역이 상생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생발전의 핵심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돼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협력방안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세종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세종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국토 개발의 경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충청권의 지역발전동력은 수도권에서부터 정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이입되어 왔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세종시를 둘러싼 개발의 기회나 공간적인 흐름들이 대부분 세종시 동편으로 치우쳐 있고, 세종시 서측에 위치한 공주시는 세종시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만한 것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남도는 서부 지역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세종

시와의 공간적·기능적 관계 속에서 도시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물리적인 영향권 범위를 레일리(Reilly)의 상권 모형을 통해 측정한 결과, 세종시 서측 시·군 상당지역까지 포섭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종시 북측의 천안시, 아산시, 동측의 청주·청원, 남측의 대전광역시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는 세종시의 배후 대도시이자 고차 서비스 지역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포섭되지 않고 오히려 세종시와 경쟁관계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세종시 서측지역인 공주방향의 지역은 세종시 건설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크고 세종시로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발전 위상의 근본적 한계를 지닌 공주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적 접근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6~2020)을 수립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주변지역의 기능특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기군 전체지역과 공주시 일부지역이 편입된 상황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종시 본연의 건설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광역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계도시권(Global City Region)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세종시 시나리오

세종시와 주변 지역의 관계는 진화론적 관점(evolutionally concept)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세종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자족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급 주택지역 정도에 머물 경우, 세종시는 주변 지역의 인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 홀(Black Hole)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 경우, 세종시 국가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의 고급 주거용 신도시로 전락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세종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세종시의 건설단계에 따라 주변지역이 우위, 열위, 경쟁관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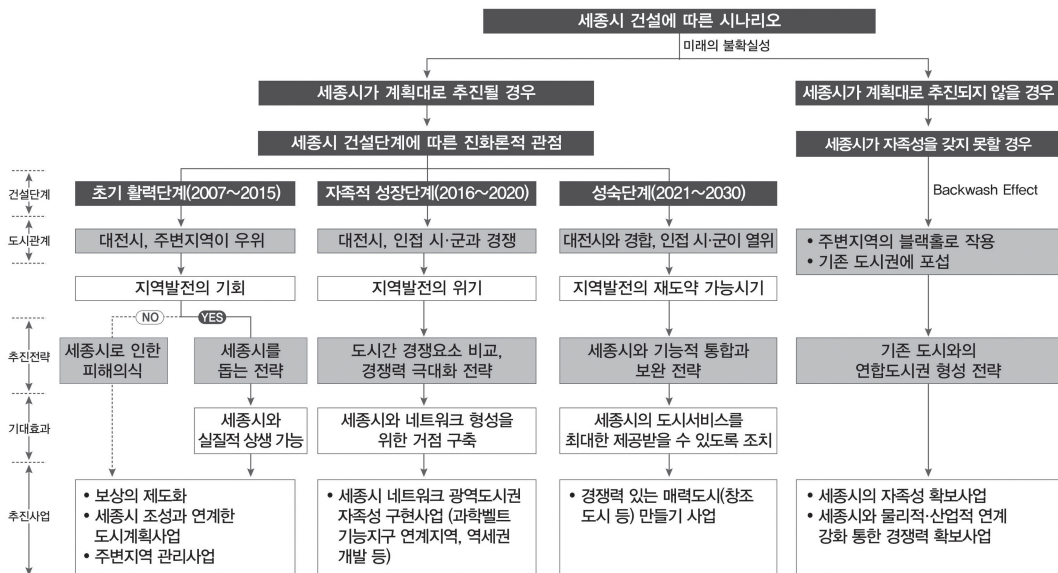
1단계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일부 인구유입은 불가피하나 세종시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대전시와 주변 시·군이 여전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기에는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고 세종시를 돕는 상생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단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세종시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충남 지역발전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는 세종시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3단계인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세종시가 대전시와 경합하고 주변 시·군이 열위에 놓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세종시와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보완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발전의 재도약시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요약하면, 세종시 건설 초기단계에서 주변지역의 인구유출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현상은 세종시의 도시공간이 채워질수록 약화될 것이다. 오히려 성장단계 중반 이후에는 중앙단위 행정기능 입주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산업시설 등의 수요가 주변지역에 나타나면서 세종시 건설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향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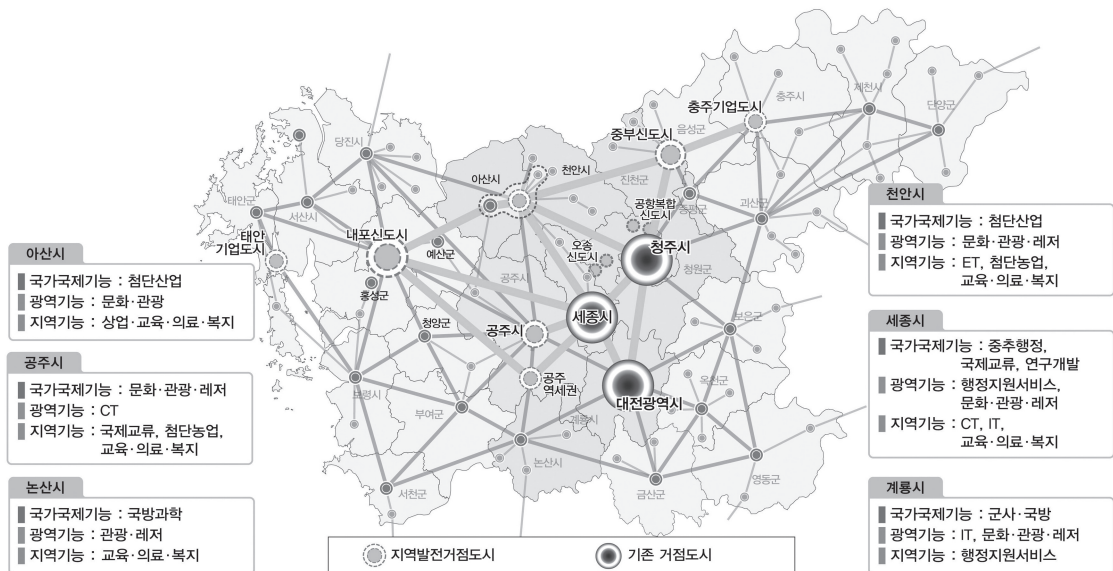
〈그림 1〉 세종시 건설에 따른 시나리오

4. 상생발전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반성장의 방향

충청남도가 세종시와 공생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종시와 주변지역이 상생발전을 통해 “국토 중심부에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형 대도시권을 형성”해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생발전의 핵심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협력방안을 만드는 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의 발전방향은 우선, 세종시에서 공주와 내포신도시를 거쳐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이 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충남은 동서지역 간에 공간적인 통합이나 교통연계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세종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가장 가까이 찾을 수 있는 해안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큰 틀에서는 호남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행정의 중심에 방위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세종시와 충남이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논산축을 따라 호남지역과 연결하는 국토상생발전의 모델로 국가적인 대의명분을 찾아야 한다.

둘째, 세종시 뿐 아니라 세종시 주변 시·군도 국가국제기능, 광역기능, 지역기능을 각각 특화해, 세종시와 주변지역 발전거점과의 네트워크 도시체계¹⁾를 구축해야 한다. 세종시에는 행정, 문화, 국제화 기능 등 선별적인 자족기능을 두고, 산업시설 등의 자족기능은 주변지역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기능간에 연계시켜야 한다.



〈그림 2〉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1) 네트워크 도시체계는 전문화된 중심지들 사이의 수평적·비계층적인 관계로 구성되고, 도시들 사이에 전문화·공간분업·시너지·협력·혁신에 입각한 외부경제를 형성하며 대도시 주변 소도시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

5. 충청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방안

1) 상생발전,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가 관건

세종시의 원활한 개발과 조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차질 없는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세종시가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용기반을 확보하는 등 자족기능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종시가 주변지역을 공동화시키지 않고 인구 5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5만명에서 20만명에 달하는 기반부문의 고용 유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총 1만 5천명 규모의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만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시(공무원 5,800명 근무에 인구 7만명 유지)의 사례를 감안하면, 세종시는 1만 5천명의 공무원이 유입되어 약 20만명의 인구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0만명의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추가적으로 10~20만명의 고용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주변지역의 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주변지역을 공동화내지는 쇠퇴시키는 신도시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미완의 침체도시로 남아 국가와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의 미래 신성장동력 인프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고, 세종시 주변지역에 3세대형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고용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 상생발전,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세종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 50만명의 세종시만으로는 이같은 정책 목적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종시와 주변도시가 기능적 보완과 연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구축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도시 격차와 이원적인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세종시는 21세기 국제적 수준의 모델도시로서 시설 및 서비스 기반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도시기반과 시설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심각한 격차와 공간 구조가 분리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세종시 주변지역 주민의 이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인근 중소도시 주민들도 소외와 불만이 없도록 도시기반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세종시 주변지역, 특히 중소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특별재정 지원방안(세종시와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세

종시는 주변 농촌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후원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세종시 입주기관과 주변 농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체결해 도농간 상호교류를 시작하고, 해체된 주민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개를 제안한다.

3) 상생발전, 지역간 공동협력사업부터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거점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점간 공동이용, 종합이용, 상호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세종시와 주변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종시 입주기관(행정기관, 대학, 기업 등)과 충남 주변 농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체결해 도농간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세종시 주변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을 입주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지산지소(地產地消)를 실천하여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에 경제적인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국제도시로 조성된다. 대규모 국제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종시는 新도시이다 보니 도시의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세종시가 미래의 도시라면, 공주-부여를 역사도시로 하는 광역도시권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종시의 국제교육기능과 공주 부여의 백제역사문화산업이 어우러진다면 세계적인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와 경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태관광 및 농촌체험 등을 토대로 테마관광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민 및 광역관광 여가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생태관광이나 농촌체험관광이야말로 사업의 효과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내발적인 발전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의 체계적인 성장관리를 위해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관리시스템(토지이용, 환경관리 등)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성장이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경제적 특성과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로 설정된 성장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6. 결론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인근 도시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의 발전전략과 상생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민·관 파트너십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국무 총리실)과 지방간의 협력적 분권체제를 형성하고,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주변 지역이 하나의 자족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충청남도과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지금까지의 발전전략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발전전략을 국가발전의 논리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이해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나아가 충청권은 세종시 출범을 계기로 충남과 충북 그리고 대전이 진정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新수도권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세종시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

세종시와 연계한 공주시 상생발전방안

정환영 |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박치영 |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정석호 | 공주대 연구교수

I. 머리말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공주시의 장기면, 의당면, 반포면 일부지역 5,800여명과 76.61km²가 편입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출범은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충청권의 공동발전,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주시의 일부지역이 편입되면서 행·재정적 손실 및 시세 위축, 공동화, 주변지역의 규제로 공주시의 발전 잠재력 단절, 상권 위축, 성장동력 약화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건설·운영이 공주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세종시 추진의 목적이었던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라는 당위성에 맞는 공주시와 세종시간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주시의 역사·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 등 지역특성을 연계하여 공주시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세종시 설치에 따른 공주시의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하여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종시 건설과 운영이 공주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반 영향 분석과 지역특성을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종시 구성에 따른 공주시의 장기발전 비전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공주시와 세종시간의 상생발전 계획 방향

공주시와 세종시간 상생발전 방안 구축을 위한 계획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종시 광역도시계획



〈그림 1〉 대성지역

상의 도시네트워크 형성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 소재 중추행정 기능을 옮겨와 국토거점의 복합기능 도시를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 세종시 건설과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을 통해 국토 중심부에 새로운 국토발전 거점 형성에 있다.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해 공주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부각하고, 세종시의 미흡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에 건의시 상생발전 사업은 국가적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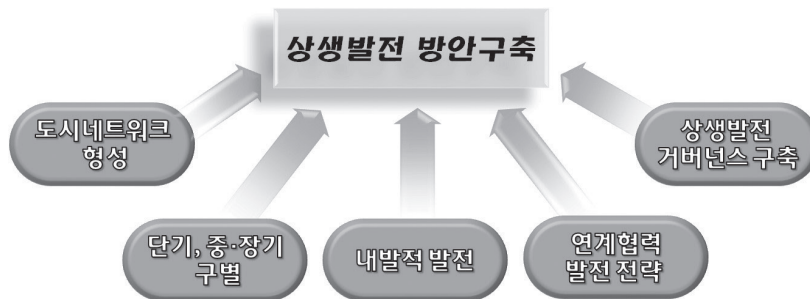
둘째,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전제로 한 공주시 발전 방안을 세종시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현재~2015)는 역량 강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중기 단계(2016~2020)는 세종시와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세종시 광역권역내 자족성 구현, 후기 단계(2021~2030)는 세종시와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구축을 통해 협력·상생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주시의 시세확충을 위한 내발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주시 일부지역 편입에 따른 시세 위축에 대응하는 국가 지원 가능한 사업, 광역적 협력사업, 지자체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

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주시의 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공주시의 우수한 역사·문화·교육·관광자원,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알밤 향토산업 등 도농교류 및 향토산업의 성과와 연계한 관광 및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위 계획 및 정책, 공간·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연계협력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주시와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공간·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전략 도출과 공주시의 특화된 기능을 교통 및 도시 인프라정비, 역사·문화, 5도2촌사업, 관광·도농교류, 교육으로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상생발전을 위한 다원적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원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협력사업 추진동력 확보, 사업추진체계 구축, 참여기관 역할 분담을 통해 공유 및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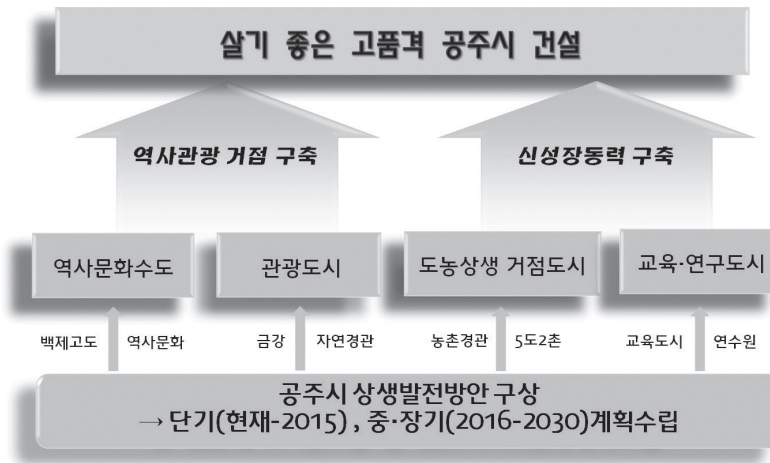


〈그림 2〉 상생발전의 계획 방향

Ⅲ.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안

1. 공주시와 세종시간의 상생발전 비전

공주시와 세종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공주시의 역사·문화·관광, 교육·연구자원을 특화하여 역사관광 거점과 신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공주시의 발전방안을 구상하여 살기 좋은 고품격 공주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 기본구상

2.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1) 추진전략

첫째, 「역사·문화수도」로의 발전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공주시는 「역사·문화수도」로 구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공주시의 역사·문화 수도를 위해서 역사·문화를 테마로 설정하고, 백제문화 적극 활용, 여가·스포츠·레저, 금강수변관광축 개발, 밤축제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세부사업은 단기적 관점에서 공주시 백제고도 복·육성사업 지원과 공주문화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중기적 관점에서 국립공주민속촌 건립사업,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국제기능 확충 등이다.

둘째, 세계로 도약하는 「관광도시」로의 발전이다. 세종시의 건설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이 증대되고 공주시 방문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행정업무는 세종시에서, 관광 및 여가는 공주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세부사업은 단기적 관점에서 금강유역권 개발 사업, 중기적 관점에서 세종시 광역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관광컨벤션기능 육성사업 등이다.

셋째, 도농상생 거점도시로의 발전이다. 정부부처의 이전에 따라 이주 공무원 가족의 전원생활 및 도농교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의 실국과 「1관1촌 결연사업」,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화, 식품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내발적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넷째, 「교육연구중심도시」로의 발전이다. 공주고,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충남 과학고 등 공주시 관내 우수 고등학교의 육성을 통하여 세종시 중앙공무원 자녀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도모,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공주대학교 및 공주교육대학교의 기초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 수행, 공주에 과학인

종합복지 타운을 조성하여 전 세계 과학인 가족의 휴양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

2) 세부 사업과 파급효과

상생발전 방안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과 관련하여 ①5개 전략사업(인프라정비, 역사문화수도, 관광도시, 도농상생거점도시, 교육연구도시) 수행과 관련한 사업예산 3조2,067억원과 ②공주시와 관련하여 세종시의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2,000억원을 합한 총 3조4,0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주시 5개 전략사업과 세종시의 공주시 관련 인프라구축사업 예산 2,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조4,067억원의 사업추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7조6,72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0,052명(年間),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조3,118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상생발전 사업

전략	시기	사업명
인프라 정비	단기	공주시 도시계획 상의 시가 용지확보 및 광역적 도시인프라 정비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관광·문화진흥사업 추진체계 구축사업
		광역적 녹지 및 경관 축 지정과 관리체계 구축사업
		지역교통망 확충사업
	중기	세종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충청권 혁신네트워크 결절지 육성
역사·문화 수도	단기	공주시 백제고도 복원·육성사업 지원
		공주문화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중기	국립공주민속촌 건립사업
	중장기	국가국제기능 확충
관광도시	단기	금강유역권 개발 사업
	중장기	세종시 광역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관광컨벤션기능 육성사업
도농상생거점도시	단기	환경성 질환 치유를 위한 체험공간조성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유치
		5도2촌 주말도시 연계사업(로컬푸드시스템, 식품클러스터 구축)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중기	세종시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조성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
		농축산물 유통·물류단지 조성
교육·연구도시	단기	국립과학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중기	공무원 연수센터 및 레저 복합공간 조성
	중장기	공주 과학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국가산업단지 조성

Ⅳ. 결론 - 공주시와 세종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언

첫째, 세종시 설치 및 건설과정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청 산하 상생발전기획단 또는 세종시와 창구역할을 통한 상호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해 상생발전 담당을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세종시 주거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주시에 세종시 이주 공무원 유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원마을사업과 세종시와 인접한 주변지역에 인구유입 지원을 위한 부동산업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세종시 관련사업의 유치활동 및 지원에 관한 공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시 관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며, 세종시 관련 효과적인 유치활동, 행·재정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통한 사업 유치, 민·관·학의 거버넌스를 지원함으로써 다각적인 유치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원적 협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도시계획 차원의 도시계획업무를 상호 조정 및 조율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공주시의 내발적 발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주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자원,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연계하여 공주시 자체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주시와 세종시 상생방안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정보와 세종시 건설에 따라 공주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매체에 공주시와 세종시 상생발전 사업 홍보, 시민단체, 전문가와 공주시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간담회 개최, 공주시와 세종시 상생발전에 대한 세미나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종시 건설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요구 가능한 권리와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주시 발전방향을 구축할 수 있다.

세종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장철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세종시 첫마을 1~2단지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올 7월에는 세종시특별자치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9월에는 국무총리실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세종시 시대가 열린다. 세종시 건설문제는 2002년 9월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하여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 10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그리고 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2005년 행정타운+교육+산업도시를 묶는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전역을 세종시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2월 27일 제정되면서 공간적 범위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편입지역을 포함하여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신동·둔곡지구로 지정되면서 세종시의 도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세종시 내외의 여건변화에 맞춰 그동안 예정지역 위주의 개발계획을 세종시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에서는 세종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세종시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1) 세종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세종시 개발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근거하여 2006년 7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이, 동년 11월에는 개발계획이 각각 수립·고시되었으며, 12월에는 행정도시 명칭이 세종시로 확

정되었다. 개발계획에서는 도시 목표인구를 50만 명으로 계획하고, 사업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 일원에 걸쳐 총 297km²(예정지역 72.91km² + 주변지역 223.77km²)를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실제 개발되는 도시면적(72.9km²)의 토지이용은 공원녹지 52.9%, 주거용지 21.0%, 상업·업무용지 2.0%, 산업용지 1.1%, 대학용지 2.2%, 행정용지 1.4%, 기반시설용지 19.4% 등으로 구성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의 총사업비는 22.5조원으로 정부재정 8.5조원(광역교통시설 3.15조원, 중앙행정기관 1.6조원, 학교/시청사 등 3.75조원), LH공사 14조원(용지보상 5.01조원, 부지조성·기반시설 8.99조원) 등 모두 22.5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06년 토지보상 단계, 2007년 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단계적인 생활권별 부지조성 공사와 정부청사, 광역도로, 환경기초시설 등 총 56건의 건설공사가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정부 투자분 8조 5천억원 중 1조 9천억원, 사업시행자인 LH 투자분 14조원 중 6조 2천억원이 투입돼 36%의 집행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에 이전하는 정부기관을 위한 청사건립은 1,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며, 3단계 사업은 설계중으로 2012년 8월에 착공해 14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공무원 등을 위한 주택공급도 적극 추진중으로, 2011년 말에는 첫마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1단계 2,240가구, 6,000여명의 주민입주에 이어 4,300가구에 이르는 2단계 입주가 올해 6월부터 시작되었다.

2) 여건변화 및 추진상의 문제점

세종시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시작된 사업구역이 지금은 세종시로 확대되어 올해 7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세종시 관할구역의 범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72.9km²에서 세종시 관할구역인 465.23km²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세종시와 4km 떨어진 대전시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사업화하는 기능지구로 세종시(청원군, 천안시 등)가 선정되었다.

한편 세종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우선 행정특별회계(8.5조원) 소관 사업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의 개발사업은 행정특별회계를 조기에 집중 투입하여 중앙행정, 문화, 도시행정기능을 정착시키고, 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복지 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행특회계 사업은 2011년 말까지 22% 가량 집행되었으며 2015년까지 70%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지만, 민간투자 사업은 국책연구기관 이전사업만 확정(사업비 약 5,300억)되었을 뿐 나머지 사업은 유치 미정인 실정으로 아직은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행특회계 소관사업 이외의 민간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중에 하나는 투자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산업단지,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비교 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민간투자유치가 부진함으로 유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요 개발사업

6대 기능권역	행특회계 사업	민간투자 사업
중앙행정	· 16개중앙행정기관	-
문화·국제교류	· 박물관(5), 미술관(5), 공연장(1), 도서관(1)	·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공항터미널, 호텔 등
도시행정	· 법원, 검찰청, 시청사, 교육청, 도매시장 등	-
대학연구	-	· 종합대학 2~3개소 유치(대학원 별도) · 16개 국책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의료복지	-	·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유치
첨단지식기반	-	· 첨단지식기반 기업 등

둘째, 과학벨트 입지에 따른 세종시 발전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세종시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세종시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가 거점지구와 인접(약 4km거리)하여 실질적인 과학벨트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에 거점지구 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주거·교육·의료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국제적 우수인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국제교류 기능을 활용하여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국제교류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구역은 [예정지역+주변지역]을 포함한 297km² 였으나, 연기군 나머지 지역 168.23km²(1개읍, 4개면)를 포함하여 세종시로 편입되었다.

〈표 2〉 세종시 행정구역 현황

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200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2012)
면적	- 대상 면적 : 297km ² - 예정지역 : 72.9km ² - 주변지역 : 224.1km ²	- 대상 면적 : 465.23km ² - 예정지역 + 주변지역 : 297km ² - 편입지역 168.23km ²
인구 (2012년)	22,342명	82,099명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행특회계 예산이 직접 투입되나, 그 외 편입지역은 행특회계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이 세종시로 통합되면서 교육·문화·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서비스 격차로 인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 생활환경 불균형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청 이전에 따른 조치원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중심상권 위축의 가능성, 예정지역과 인접한 편입지역에서 난개발 발생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넷째, 세종시의 도시성장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경쟁적인 투자유치 및 세종시와 주변도시 간 중복적 산업육성 및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난개발 발생이 우려된다. 그리고 광역적 협력체계 미흡으로 도시 간 대중교통 연계체계 미비 및 공동이용이 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의 중복 투자 우려 등의 비효율이 예상된다. 한편 편입 지자체의 인구, 면적이 세종시로 일부 편입됨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의 행정상, 재정상 손실발생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 지역 465.23km²를 관할하는 인구 12만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세종시 자치사무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종시는 도시특성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행정효율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출범 초기에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취약한 자치기반으로 인해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광역시에 걸맞는 지방세 등 재정확보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예정지역 성장에 따른 행정 및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 서비스 제공에 차질 우려되고, 양질의 행정 및 교육서비스를 위한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된다.

여섯째, 세종시의 빠른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 행복도시 건설은 행복청 중심으로 건설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세종시 이전은 총리실 중심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원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도시건설사업 지원은 행복청 중심에서 범정부적 종합지원 체계로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발전적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3.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 근거 및 주요 내용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12. 제정, 2012.07 시행) 제3조(국가의 책무),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에 세종시 편입지자체(공주, 청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11.01 제정) 제2조 제3항에 세종특별자치시와 편입지자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지자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지자체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의 의의는 세종시 건설 및 발전에 관한 미래상 확립, 중앙정부 차원에

서의 지원방향 제시, 향후 관련 법정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의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의 수립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1차적 범위는 세종시 관할구역(465.23km²), 2차적 범위는 세종시 주변도시(2,980km²)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기조에 충실한 실천전략 제시, 세종시의 조기정착 및 빠른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략 제시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종시 예정지역(행복도시)의 원활한 건설 및 활성화, 세종시 내 지역 간 및 주변도시와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항 발굴 등이다.

4.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의 추진전략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의 추진전략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 상생발전도시, 특별자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중심도시에 부합하는 도시성장동력의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세종시 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행특회계 소관사업에 대한 체계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제·재정·행정 지원 및 적정 토지공급 방식을 포함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중앙행정기능 및 민간투자 유치 여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대형병원과 우수대학, 국제업무복합시설 등의 핵심시설별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를 추진한다. 과학벨트의 연구결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예정지역 내 창조적 벤처단지 조성 및 특화산업 연구개발 지원, 산학일체형 인력 및 융합전문가 양성 등 과학벨트와 연계한 산업지원과 전문인력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근무자에게 가족형 맞춤형 주택 특별분양을 검토하고 국제공모를 통한 국제적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청원, 천안 등 인근 기능지구를 연계하는 중심적인 사이언스 비즈니스 플라자(SB 플라자)를 구축하는 등 연구결과와 사업화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세종시 편입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편입지역에 세종시 특화산업인 나노융합소재산업과 무선통신산업으로 특화된 신규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편입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기반(공공)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시청 등 공공시설 이전적지 시설전환 및 전통시장 현대화 등 편입지역 활성화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 대중교통 확충 및 상호 교류를 확대하여 세종시의 통합을 강화하고, 예정지역과 인접한 편입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등 계획적인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주변도시 상황과 연계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세종시와 인접한 천안, 청원·청주, 공주, 대전 등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적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공동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시설을 광역적으로 통합하고, 세종시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도시 간 광역적 시설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공주시, 청원군 등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진한다.

다섯째, 광역행정 조기정착을 위한 세종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세종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행정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광역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시청 및 교육청 조직을 적정규모로 구성하고, 광역기초사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조직을 확대하고, 탄력적 인력 충원으로 우수 행정·교육공무원을 확보한다.

여섯째, 세종시의 빠른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세종시의 도시성숙단계까지 예정지역 도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행복청의 도시활성화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현안조정 및 정부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총리실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을 도시활성화 및 현안 조정·지원 기능 위주로 변경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간다. 그리고 도시계획 및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세종동반발전협의회(가칭) 구성 및 인사교류 등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세종시와 행복청간 발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

한편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쟁점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종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첫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주거공급, 총리실 등 정부 부처 이전,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추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종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대상지역 문제, 현재 세종시 개발사업의 입지문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대상지역 문제 등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활성화의 효과를 편입지역,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만이 세종시의 성공에 첩경이 될 것으로 믿는다.

향후 세종시가 개청하면 총리실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입지에 따른 환경영향과 향후 전망

정종관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물 부족, 토양침식, 사막화,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식량위기, 환경난민, 국가파탄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경제 및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레스터 브라운은 환경분야 세계 3대 싱크탱크로 꼽히는 월드위치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의 최신작 「앵그리 플래닛」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냉정하게 상술하고 더불어 단호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정의된 안보 개념 아래 전 세계가 시급하게 실행해야 할 방안을 레스터 브라운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플랜 B’라고 한다.

플랜B에서는 자연부양계의 지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80% 줄이고, 2040년까지 인구를 80억 명으로 안정시키고, 빈곤을 퇴치하고, 숲, 토양, 대수층, 어장 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배출량 줄이기는 교통재편으로 에너지 경제 효율 향상,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감축, 삼림보전

과 토양 안정화가 포함된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경제의 혁신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시장이 누락해온 화석연료의 간접비용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무엇보다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태양, 지열, 풍력은 새로운 에너지 경제의 주축이 될 것이다. 육지의 풍력발전 잠재력은 현재 세계 전력 소비량을 모두 합친 것의 40배에 달한다.

특히 충남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석탄화력 해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바, 대기오염 줄이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연간 13,200명 초과사망의 원인이 석탄화력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히 충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전력생산

2012년 1월 말 기준 충청남도의 가동 중인 전력 시설용량은 15,721MW로 전국 발전시설용량

79,342MW의 19.8%를 차지한다. 화력발전(기력+복합+내연력)만의 설비용량은 15,253MW로 전국(52,362MW) 대비 29.1%이다. 게다가 전력생산량으로 본 화력발전 가동률은 전국(282,261GWh) 대비 41.3%로 실제 가동률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충남의 2010년 화력발전(기력+복합+내연력) 전력생산량은 116,688GWh로 전국(455,070GWh)의 25.6%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판매기준으로 산정

한 2011년 사용량은 42,650GWh로 전국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지역은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 집중과 소비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은 도내 10대 에너지 다소비업체 가운데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5대 화력발전업체 에너지 사용량이 21,457천 TOE(=석유환산톤수)로 25,399천TOE의 8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충청남도 내 주요 에너지 사용현황

순위	업체명	업종	연료(TOE)	전력(MWh)	총에너지(TOE)
1	보령화력	발전	7,188,777	74,311	7,204,754
2	태안화력	발전	6,690,607	44,542	6,700,183
3	당진화력	발전	6,210,125	1,269,595	6,483,088
4	○○화학	석화	950,475	783,927	1,119,019
5	○○오일	석화	806,353	341,518	879,779
6	○○대산	석화	658,511	210,127	703,688
7	○○대산	석화	553,416	540,211	669,561
8	○○제철	금속	115,527	2,115,727	570,408
9	서천화력	발전	531,864	100,683	553,511
10	GS EPS	발전	514,885	1,882	515,290
합계	10개		24,220,540	5,482,523	25,399,281

※ 주 : 에너지 사용량 목표제 적용대상인 연간 500,000TOE 이상 업체

※ 자료 : 충청남도 에너지통계 행정자료로부터 산정, 2009

2) 에너지 및 전력수급계획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6년)이 수립된 이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설비계획에서 부문별 계획으로 성격이 변화하였고,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년 12월)은 전환부문 수요로 취급되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일환으로서 전력수요 예측보다 목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현재 전력수급기

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하고 실무는 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데 2012년말 제6차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전력수요는 15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설비구성을 도출하고 발전설비 투자방향의 조사를 하여 최적화계획에 가장 근접한 발전설비 건설의향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표 2〉 충청남도내 주요 발전시설 용량 및 전력생산 현황

발전소명	위치	시설용량 (MW)	건설/계획 (MW)	2009 발전량 (GWh)	2010 발전량 (GWh)	비고
계		15,700	8,835	107,143	116,688	석탄 12,400, 복합 2,834, 중유 466
서천화력 (중부발전)	서천 서면 마량	400 (200×2)	1,000	2,639	2,858	기존화력 폐지 및 신서천화력
보령화력 (중부발전)	보령 오천 오포	4,000 (500×8)	2,000	30,805	33,536	
보령복합 (중부발전)	보령화력 발전소내	1,800 (150×12)	-450	3,743	7,203	복합화력 3기 이전
태안화력 (서부발전)	태안 원북 방갈	4,000 (500×8)	2,380	33,083	32,601	태안9,10호기와 IGCC 증설
당진화력 (동서발전)	당진 석문 교로	4,000 (500×8)	2,040	32,457	34,258	당진9,10호기 증설
부곡복합 (GS EPS)	당진 송악 부곡	1,034 (501+533)	415	4,416	6,172	3호기 증설
현대대산	서산 대산 독곶	466			60	자체 비상전력 공급
동부화력	당진 석문 교로		1,000			계획 중

※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11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의 발전설비용량은 2014년에 10만MW를 넘어설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 매년 기준수요보다 1,000-12,000MW를 수요관리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간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세계 총에너지 수요가 2035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하는데 비해 전력생산량은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은 세계적으로 발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석탄화력 비중은 2008년 약 40%에서 2035년 37%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천연가스 발전은 22%에서 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19%에서 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발전시설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력 1kWh 생산 당 석탄 991g, 석유 782g, LNG 549g, 태양광 57g, 원자력 10g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태양광과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전력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용의 에너지를 채택하게 되는데, 1kWh 당 2012년 4월 전력시장 정산단가(평균 가격기준)는 석탄 23.057원, 원자력 36.920원, 국내탄 73.900원, LNG 112.831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은 LNG나 원자력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비용도 싸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수익이 높으니까 발전소 가동기간인 20~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 이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인 보정계수를 민자발전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게 되어 발전자회사와 민간사업자간 전력구매금액의 왜곡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2008년부터 도입된 보정계수는 발전원가와 구매가의 차이를 조정하도록 발전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가격조정률인데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정하고 지식경제부 전기

위원회가 승인한다.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정해지는 전력가격에 보정계수를 곱해 정산하는데, 2012년 상반기 보정계수는 석탄 15.60%, 원자력 24.98%, 국내탄 50.00%, LNG 76.34%이다.

특히 2012년말 예정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은 동부발전 1,000MW 등 6개 기업의 총설비용량은 22,000MW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피해 저감보다 이윤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단위지역 난립과 밀집에 의한 환경오염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격결정 방식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표 3〉 장기 전력수급 전망

(단위: MW)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집단 에너지	합계
2010	18,176	24,205	19,422	5,372	3,900	2,127	1,674	75,416
	24.8	32.1	25.8	7.1	5.2	2.8	2.2	100
2015	24,516	30,945	23,517	4,108	4,700	4,183	4,314	96,283
	25.5	32.2	24.4	4.3	4.9	4.3	4.4	100
2020	31,516	31,945	23,517	4,108	4,700	6,653	4,846	107,285
	29.4	29.7	21.9	3.8	4.4	6.2	4.6	100
2024	35,916	31,445	23,517	4,108	4,700	8,061	4,846	112,593
	31.9	27.9	20.9	3.6	4.2	7.2	4.3	100

※ 자료 :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3) 대기오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은 에너지 산업연소,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 도로이동, 비도로이동, 폐기물처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대기배출원 조사자료(SODAC)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관리(SODAM) 산정 방법

론으로 산출한다. 항목별 오염물질 배출량은 CO, SOx는 연료전환, 연소기술 향상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특히 미세먼지(PM10)는 2007년 4,915톤/년에서 5,092톤/년으로 지역내총생산 증가와 경제 및 산업규모 확대, 배출시설증가, 에너지소비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 점오

염원의 배출량은 총먼지(TSP) 자료를 토대로 미세먼지(PM10), 극미세먼지(PM2.5)의 조성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굴뚝의 배출먼지 조사연구에서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TSP 평균농도는 4.68mg/Sm³, PM10 4.06mg/Sm³, PM2.5 3.12mg/Sm³이었으며, 무연탄 화력발전소의 TSP 평균농도는 2.93mg/Sm³, PM10 2.40mg/Sm³, PM2.5 1.31mg/Sm³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수준을 보였다. 발전용량 500MW 이상인 시설의 경우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40mg/Sm³ 이하로 되어 있다.

조사결과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총먼지의 농도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굴뚝으로 배출되는 먼지의 대부분이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입자이면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모두 먼지 배출허용기준 만족, 배출기준은 TSP 농도로만 판단)만으로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입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발전소에 설치 가동 중인 집진시설의 고효율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극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여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연평균 25 μ g/m³이하)이며, 이와 함께 미세입자 2차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관리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4〉 발전시설 연료별 입자상물질 농도

(단위: mg/Sm³)

	TSP	PM10	PM2.5
유연탄	4.68	4.06	3.12
무연탄	2.93	2.40	1.31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연료 연소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 배출특성, 2011

배출기준 에너지연소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력발전 및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 기준 충남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6,600만톤으로 전국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1억7,100만tCO₂의 38.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10년 동안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7~80% 수준인데 화력발전 증설에 따라 이러한 비중이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미기후의 변화

화력발전소의 발열로 인한 주변 지역영향을 판단하려면 미기후 결정의 요인이 되는 자연계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표 온도는 유입과 방출되는 열에너지의 평형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지표면에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간의 평형관계는 어떤 물질의 온도가 상승하면 그 주위에 열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방출하는 물리적 특성에 의해 유지된다. 그래서 온배수 배출로 인해 수면에 흡수되는 에너지 증가는 그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와 평형상태가 될 때까지 온도를 올리

〈표 5〉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기준)

	합계	발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1인당 배출량	GRDP당 배출량
	(천tCO2)						(tCO2/인)	(tCO2/백만원)
충남	85,759	66,413	10,974	5,263	2,905	204	44.70	2.08
전국	492,704	171,098	156,917	98,173	61,575	4,942	10.24	0.68

※ 주 : 발전은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전환부문 포함

※ 자료 : 지식경제부,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특성, 2009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온배수의 증발산에 의한 해무의 발생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예측평가는 쉽지 않다.

4) 온배수 및 해양생태

발전 온배수(Thermal Effluents)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발전 온배수는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연평균 약 7℃ 정도 높으며 유엔해양협약은 온배수를 ‘인위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직·간접적으로 해양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시키는’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2012년 1월 기준 화력발전소의 열이용 효율은 41% 수준이다. 나머지는 굴뚝이나 온배수 형태로 주변지역으로 손실된다. 온배수의 방류로 인해 주변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취수 심층방류 등 다양한 열배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된다.

수중생태계의 변화

7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는 열효율이 약 40%로 시간당 79,485톤의 냉각수를 8.3℃ 가량 높일 수 있다. 이에 비해 700MW급 LNG 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에 의한 발전을 병행하므로 열효율이 약 70%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56,997톤의 냉각수를 7℃ 상승시킨다면 온배수에 의한 열배출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수중의 생물학적 순환과정에서 수온은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이다. 체내수분의 온도가 상승하면 그 동물의 신진대사 속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산소 요구량도 증가한다. 그러나 수온이 상승하면 수중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는 반면 이용할 수 있는 산소는 감소한다. 산소가 충분하다면 수온상승에 따라 물의 순환속도는 빨라진다. 이러한 현상은 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최적온도가 각각 다르므로 수온에 따라 생물의 우점종이 달라진다.

따뜻한 물에서는 어류의 질병발생이 증가하거나 산란을 위해 수온을 지표로 삼아 이동 시 산란 적 온도도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수온 상승에 따라

용존산소가 감소하면 오염유기물질의 동화작용이 위축되어 악취, 부유물질, 어류사멸 등으로 혐기성 조건으로 변화하고 자정능력 저하를 초래하여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수온 상승에 의해 기포발생도 늘어나서 방류수역의 기존 무기퇴적물이 농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연안 및 하구생태계에서 해양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제공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담당하는 현화식물(顯花植物, flowering plant; 꽃이 피고 종자를 만드는 식물)인 잘피는 우리나라 연안에는 온대성 잘피 8종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남해연안의 경우 193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해수온이 1~2℃ 상승함에 따라 2007년 남해연안 여수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열대성 잘피종이 남해안 전역으로 확산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연안에 자생하는 온대성 잘피(거머리말, 게바다말 등)는 봄철 수온인 약 15~20℃에서 최적의 성장을 보여주며, 수온이 점점 증가하는 여름에 그 생장이 급격히 감소한다.

수온상승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의해 해양저서동물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동, 서,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에서 채집된 바지락은 원생성 기생충인 *Perkinsus* sp.의 감염이 전 연안에서 관찰되고 있다. *Perkinsus* sp.의 조직학적 감염 특징은 병원체의 감염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병원체의 감염이 낮은 지역의 바지락에서는 주로 아가미와 외투막 조직내 감염이 관찰된 반면, 높은 감염율 지역의 바지락에서는 아가미, 외투막, 소화맹낭, 생식소, 발의 전 조직에서 병원체의 감염이 관찰되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은 주요 굴과 바지락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어, 병원성 기생충의 노출에 의한 감염성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의한 바지락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 바지락의 생리생화학적 차이는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연안환경은 기후변화 혹은 환경오염 등에 의해 변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연안생태계 변화 감시가 필요하다.

5) 화력발전 환경규제 동향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1년 말 화력발전소의 수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규제하는 법안(MATS, 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70GW의 화력발전용량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 화력발전소의 MWh당 CO₂ 배출량을 0.45톤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EPA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바탕으로 하여 2005년까지 75개의 자국내 오염원에 대한 연방기준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규제는 신규오염원 성능 기준(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으로 신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0년 기준 미국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MWh당 평균 CO₂ 배출량은 약 0.8톤으로 새로운 규제한도를 초과하는 반면 천연가스발전소의 배출량은 0.36~0.38톤으로 새로운 규제기준을 만족한다. 따라서 탄소배출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건설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미 건설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에 건설 착수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 규제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2년 현재 20여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허가 절차를 준비 중이며, 그 중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2개의 발전소는 탄소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화력발전부문은 미국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며,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클럽(Sierra Club)은 “석탄화력부문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문이지만,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엄격한 배출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천연가스발전소의 CO₂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며, 셰일가스를 비롯한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미국 내 다수의 발전설비들이 천연가스발전소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영국은 낡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면서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렇듯 석탄을 가스로 대체함으로써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었다.

3. 결론 및 향후과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는 전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에너지는 대부분 석탄, 석유, 원자력에 의한 전환과정을 거쳐 우리 손으로 오게 된다. 이때 에너지의 손실과 함께 대기오염, 온배수, 해양생태변화, 송전탑에 의한 경관훼손과 전자파 발생 등의 외부 불경제를 초래한다.

충남지역은 연료의 반입과 냉각수 확보 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어서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새로이 화력발전이 계획되거나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 12 예정)에 반영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 전원부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 증가, 주변지역 및 해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온배수에 의한 수중생태계, 미기후, 지역 어업권 등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영향평가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배출 총량제 시행과 환경경제적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아무리 사업이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추진 절차상의 흠결은 사회적 합의형성(social consensus)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화력발전의 증설이 계속될 경우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목표(BAU 대비 30% 삭감)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축소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¹⁾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개발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CCS 기술 개발과 보급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안정된 조건의 저장소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은 지진활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저장후 누출 시에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17년까지 100만톤급 저장소를 건설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에 나선다는 정부의 계획일정은 매우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CCS 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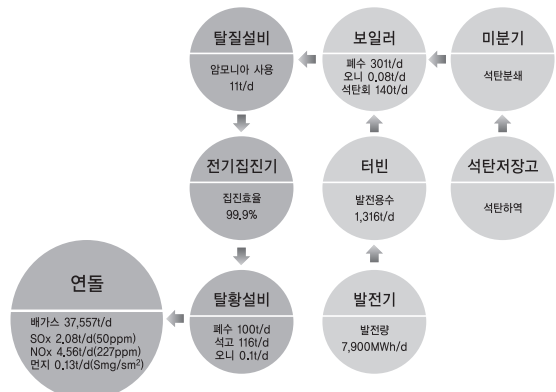
셋째, CCS 기술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기술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 및 모니터링 자료의 충분한 공개와 체계적인 안정성 검증 절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역에너지 설계’를 위해 화석연료도 재생가능에너지도 핵심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행동변화와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가능하다. 지난 시절 기술향상으로 에너지효율은 매우 높아졌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소비증가가 이어지므로 결국 총에너지

는 증가한다. 결국 연료와 전력 사용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와 같이 석유, 가스보다 값싼 구조의 전력요금 체계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고효율 기자재 사용으로 절약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열린 냉난방, 화려한 조명 네온사인등처럼 필요없는 부분에는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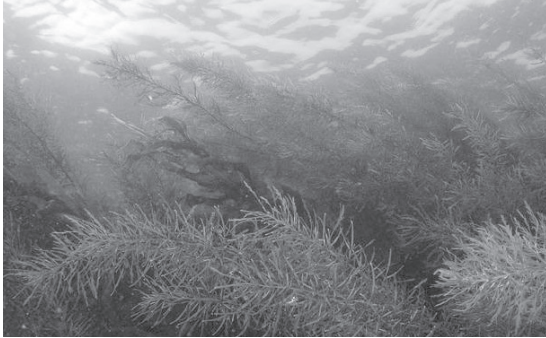
〈그림 1〉 화력발전소 전력생산 과정(400MW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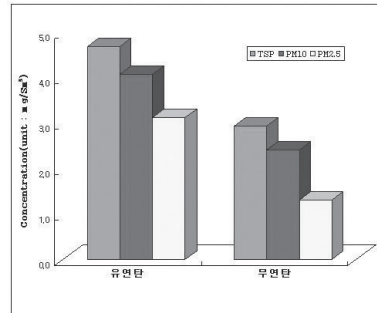
〈그림 2〉 신보령화력발전소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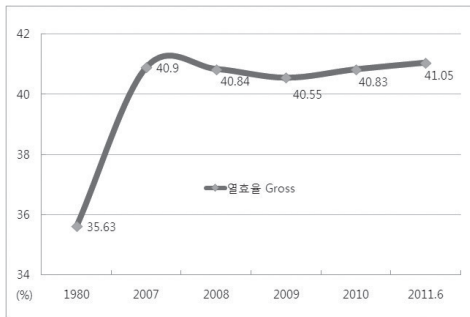
1)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88백만톤 대비 35%(311백만톤) 감축 가정시 32백만톤임.



〈그림 3〉 수중림 조성도



〈그림 4〉 석탄화력발전소 먼지 배출농도



〈그림 5〉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열이용 효율

※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11



〈그림 6〉 태안화력 온배수 방류구



잘피(게바다말)



잘피(거머리말)



보령화력 온배수



태안화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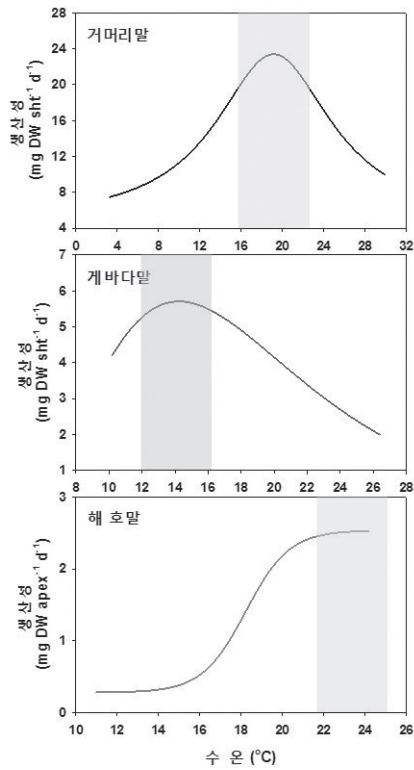


서천화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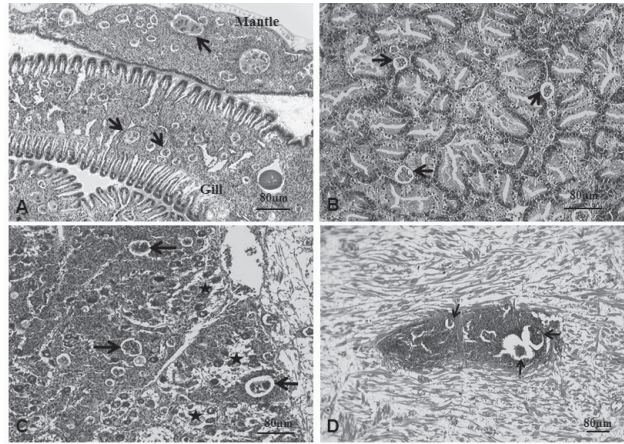


김작황 불량 비교

〈그림 7〉 화력발전과 환경생태영향



〈그림 8〉 우리나라 연안의 자생 장피종(거머리말, 게바다말)과 유입잘피종(해호말)의 수온 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동



〈그림 9〉 *Perkinsus* sp.에 감염된 바지락 조직 사진



〈그림 10〉 수온상승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김 엽체

효율적인 충남형 빗물관리 방안

오혜정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은 과거 100년 전에 비해 상승하고 있으며, 수자원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피해, 수질악화, 지표수와 지하수 부족을 초래하여 가용수자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점점 수자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가뭄지역에는 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면적과 과다한 인구로 토지나 수자원 등 국토자원 이용의 강도가 다른 국가와 달리 매우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수 취수비중은 거의 40%로 물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정인, 2008).

최근 우리나라 물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등에 의해 최근 들어 본격화된 강우패턴의 변화이다. 30년간의 월평균 강수량과 최근 5년간의 월평균 강수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들어 연간 총 강수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홍수기 강우집중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강우패턴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의 하수도 및 하천의 설계홍수량을 초과하

게 되어 도시 내의 홍수피해는 전국의 모든 도시에 예상된다(한무영, 2005). 또한, 홍수기 강우집중도의 심화와 함께 가뭄철 비강우기간 동안의 강수량도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가뭄에 의한 피해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는 물관리 시스템이 직면한 인위적인 위협요소이며, 유역내 건전한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또한 최근 물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이 많은 위협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요인에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홍수, 가뭄, 폭설 등 자연적 요인은 물론,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상하수량 증대, 시민의 기대 심리 상승 등의 인위적 요인도 존재한다. 그 외에 시설의 노후화, 기후협약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감축 필요성, 물순환의 건전성, 경제성 향상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있다. 이를 중앙집중식 물관리 시스템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대안으로 분산식 물관리 시스템 즉, 소규모 물관리를 통한 가뭄과 홍수 극복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유역 및 도시,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 회복,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비용-저에너지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증대, 미래의 물 부족에 대한 대비 및 물자

급률 향상을 위해 빗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적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김영진, 2009).

이러한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2011년 6월 9일부터 ‘물의재이용촉진 및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빗물의 중요성과 물절약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각종 용수공급, 자연재해 예방, 수질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434호, 2009.9.30)’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는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빗물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적 환경 메가트렌드인 수자원 재이용, 물순환 건전성 회복 측면에서 빗물을 재이용, 관리함으로써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물을 현장에서 재이용하는 저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 장래의 물 부족에 선제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434호, 2009.9.30)’에 근거하여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빗물관리사례 등을 검토하여 충남의 새로운 대체수자원으로서 빗물을 이용하고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빗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빗물관리 동향

1. 국내·외 빗물관리정책

1) 국외 빗물관리정책

미국은 연방정부 단위의 빗물이용 법령은 없으며, 주단위에서 법 및 지침 성격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물보전세제법(California Water Conservation Tax Law)이 1980년에 통과되어, 빗물, 중수 또는 두가지의 혼합된 형태의 사용에 대해 50%(최대 \$3,000)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후 몇 번의 개정을 걸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텍사스주 오스틴의 경우 빗물 집수시스템의 설치비용 중 30%(한도액 \$500)을 보조해 주고 있다.

독일은 빗물을 저장·이용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건설기본법, 물관리법, 음용수관리법 등에 빗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빗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빗물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빗물이용시 하수도요금 감면 및 우수세 징수 등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보다는 규제를 통해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빗물이용에 대한 규정만을 담고 있는 법률은 없으나, 잡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급배수 설비에 준하는 형태로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

는다. 1990년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도시홍수의 빈발과 지진시 비상용수공급 등의 필요성에 의해 2003년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빗물이용을 이수 측면 이외에 치수 측면도 고려하여 도시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역수해대책계획의 책정,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투시설의 정비, 빗물의 유출억제를 위한 규제, 도시홍수 예정구역 등의 지정 등 빗물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내 빗물관리정책

우리나라의 빗물관리와 관련된 법규는 수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4개법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수도법에서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의 정의, 설치 및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우수유출저감시설로서

빗물저류와 침투시설을 제시하고 또한 가뭄대책으로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대책수립 및 기준 제정운영을 제시하고 설치 대상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빗물처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빗물관리시설을 도시시설로 규정하고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 국내·외 빗물관리 사례분석

1) 국외 빗물관리 사례분석

① 미국

태평양이나 카리브해의 섬지역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빗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오하이오·애리조나·캘리포니아·플로리다·켄터키·뉴멕시코 등 주로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빗물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1> Stata Center, MIT



〈표 1〉 빗물관리 관련 법률

법규	조항	내용
수도법	법 제3조16	- 빗물이용시설의 정의 : 빗물이용시설을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정의함
	법 제16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시행규칙 제7조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빗물집수시설, 처리, 저류시설, 송·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에 대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 제30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시행령 제41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법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14. 빗물처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자연재해대책법	법 제2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정의 :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로 정의함
	법 제3조	- 국가의 책무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 제정·운영하고 가뭄극복대책으로서 빗물모으기 시설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법 제19조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운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 기법을 개발·보급, 기준적합여부 확인,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함
	시행령 제16조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등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 정의 : 우수지와 저류시설을 정의함.
	제119조	- 우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제120조	-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 자료 : 대전광역시, 2010 빗물관리기본계획, 2010(발체정리)

② 독일

독일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유럽에서 빗물이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 독일에서 빗물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빗

물을 통해 제한된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재난시 비상용수로의 이용 및 홍수예방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상수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000년 까지는 유출되는 빗물의 24%가 회수되어

대규모 빌딩을 위주로 설치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거단지 단위나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Potsdamer Platz



용수조절용 저류조

여과·식생처리

분수·커뮤니티

③ 일본

일본은 1980년 이후부터 용수공급의 어려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강우 빈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으로의 전환 등으로 그동안 안정적인 용수공급원 확보차원에서 도외시하였던 빗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1985년 도쿄돔이 건설된 이래로 물의 공급과 유출제어를 위해 빗물이용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1995년 일본 서부에서 발생한 대지진 때 기존 급수체제의 마비로 심각한 물 부족이 발생하면서 빗물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 사이타마 월드컵 경기장



2) 국내 빗물관리 사례분석

국내 빗물관리 사례는 크게 이용목적의 빗물관리와 방재목적의 빗물관리로 나눌 수 있다. 이용목적의 빗물관리는 단독주택에서의 빗물이용, 공동주택에서의 빗물이용, 교육시설에서의 빗물이용, 상업 및 업무시설에서의 빗물이용, 군에서의 빗물이용,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빗물이용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방재목적의 빗물관리는 개념을 좀 더 도시차원으로 확대하였을 경우에는 홍수로 인한 도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다 대

규모의 집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국내 우수사례

- 서울시 광진구 스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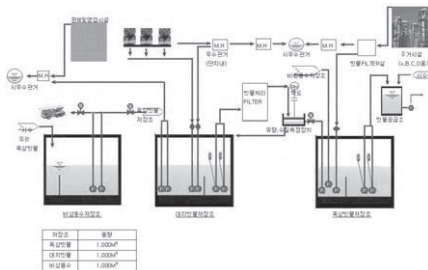
스타시티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서, 35 58층에 이르는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타시티에서는 단지 안에 내린 강우를 100mm까지 저장하여 주위의 하수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하였으며, 저장된 빗물을 조경용수나 화장실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표 2〉 외국의 빗물관리 특징 비교

국가명	기본여건	기술현황	법제화	특징	설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절감 및 유출저감 목적 - 건물의 환경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주도로 건물의 빗물이용 기술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up to 7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원 관리 및 녹지기반의 빗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MM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하수 보전 도모 -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빗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업 주도형으로 기술개발 - 집수한 빗물의 대부분을 증발에 기여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N 1989-1:2001-10 우수저류활용기술 - ATV DV자 A 138: 빗물 침투를 위한 시설의 계획, 시공 그리고 관리 - ATV DVWK A 117: 홍수 저류지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건축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 - 유출량 관리 및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RISM - STORM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역 우수이용 및 정부 주도의 우수 유출저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공공기관 주도형 - 토목연구소, 우수저류 침투기술 협회, 주택도시정비공단 등 기술개발 및 지침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도시하천침수 대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순환 건전화 기반의 빗물관리 - 강우유출저감 - 하천수의 유역내 저류 및 침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ER - WEPM

※ 자료 : 한국빗물협회세미나, 2009 및 건설기술연구원, 2009(발췌정리)

〈그림 4〉 스타시티 빗물이용시설 개요도



3. 국내 · 외 빗물관리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 미국과 강우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우강도와 총강우량 등 자연적인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나 시설설치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에 비해 토지이용밀도가 높고, 고밀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한 제도 및 계획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존의 중앙집중식 빗물관리와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상시 강우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용·침투·저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여름철 집중강우 시에는 이러한 시설에 연결된 관거를 통해 월류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개발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 시가지와 신규개발지를 구분하여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충청남도 빗물관련 현황분석

1. 충청남도 빗물관련 현황

1) 기후변화와 수자원 현황

충남지역의 경우 최근 서해안권을 제외하고 가뭄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2월부터 3월까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중국 내륙의 건조함과 관계가 깊다. 화북지방이 아닌 화중지방, 혹은 더욱 내륙지방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은 고온 건조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높은 기온을 유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가뭄판단지수는 파머가뭄지수, 표준강수지수(3개월), 평균치비율 3가지 지수를 주요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뭄 판단지수에 따르면 물부족이 시작되고 자발적 절수가 요구되는 가뭄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발간하는 재해연보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 연간 약 2조원대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재난 피해 누적액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충남지역이 1조 8,87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누적 피해액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원인도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기존 물관리 정책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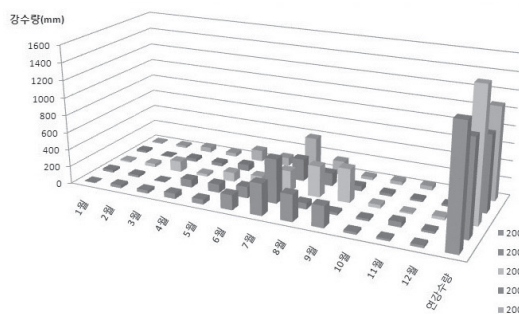
2) 용수수요 전망

용수이용 차원에서 보면, 충남의 생활용수는 2006년 457.8백만 m^3 /년에서 2020년 535.7백만 m^3 /년으로 17%의 증가가 예상되고, 농업용수는 2006년 203.2백만 m^3 /년에서 2006년 272.0백만 m^3 /년으로 34%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농업용수는 2006년 2,394.7백만 m^3 /년에서 2,281.4백만 m^3 /년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강우발생 특성

최근 5년간의 충남의 연평균 강수량은 1,183.6mm로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며, 충남 월별 강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강수량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기간에는 가뭄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충남지역 5년 평균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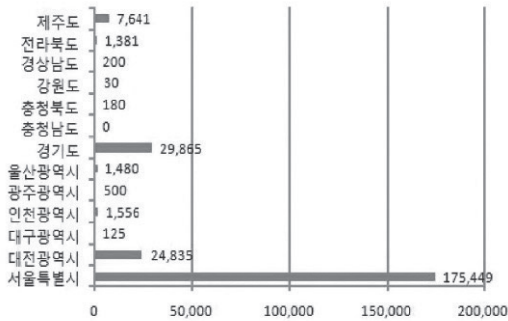
충남지역은 최근 가뭄지속일수가 증가하고 강우 발생시에는 단시간에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게릴라성 폭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5년~2009년까지의 강우자료를 살펴보면 4월~9월까지 내린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의 77%~91%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계절별 물수급 및 물관련 문제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빗물관리시설 설치현황

1) 국내 빗물관리시설 설치현황

2009년 말 기준 국내 약 425개소, 약 24만^{m³}의 빗물관리시설이 도입(설치중 포함)되었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서울시가 전체 개소의 81%)되어 있으며, 시설용량에서도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시도의 경우 미미한 수준이다(KICT, 2010).

〈그림 6〉 국내 빗물관리시설 시설용량 현황



2) 충청남도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계획 현황

충청남도는 빗물관리시설 총 7개소를 설치 및 설치중에 있으며 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세종시 첫마을 커뮤니티센터와 아산탕

정 택지개발지구에 단지차원의 물순환(빗물관리시설 포함)을 계획하고 있다.

Ⅳ.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빗물관리 방안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빗물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정책분석 및 설치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충청남도에 맞는 빗물관리방안의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는 빗물관리의 기본방향을 효율적인 충남형 빗물관리-다목적 빗물관리로 설정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리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적, 제도적 추진방안

충남지역 맞춤형 조례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빗물과 관련하여 상당히 미비한 법률 및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강우특성, 재정여건

〈표 3〉 충청남도 빗물관리시설 현황(2010.6 기준)

시군	시설물명	위치	면적(m²)	시설용량(m³)	비고
계룡시	문화체육단지	계룡시 업사면	1,680	3,602	설치중
	구룡체육단련장	계룡시 신도안면	10,035	16,636	설치중
	빗물활용 친환경 건물	계룡시	60	30	설치완료
금산군	중도지구 우수저류시설	금산읍 중도리	1,720	12,000	공사중
홍성군	삼봉 배수 펌프장	광천읍 광천리	118	2,730	
	상촌 배수 펌프장	갈산면 상촌리	218	320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서천군 마서면	2,049	1	생태조경관리

■ ‘효율적인 충남형 빗물관리’ - 다목적 빗물관리



※ 자료 : 한무영 외 2, 2009, 다목적이고 적극적인 빗물관리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방안과 국내사례, 상하수도학회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지역 내의 농경지의 전용실태 조사를 통해 빗물집수가 어려운 수자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논, 밭, 물웅덩이, 습지와 같이 평평하고 투수가 가능한 오목형 토지를 유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빗물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의 설치대상과 기준은 도시에 국한하고 있다. 즉, 대규모 체육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충남지역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유역부분(농촌지역 포함)으로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방침을 설정하여 설치대상 및 용량·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공허가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개정부터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7월 19일 이후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수립지침으로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의 도입을 제도화하는 지침을 공포를 하고 수행하게 된다. 또한 2009년 6월 2일에 의결된 물재이용 촉진 지원법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빗물이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법이다. 이와 같은 최근 빗물이용관련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빗물시설 설치 운영에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군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여 충남도의 여건에 맞는 충남도내 지자체의 빗물이용권장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제도적 장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각종 개발 및 농지 확대에 의한 대규모 토지개발 행위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토지 및 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빗물관리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산지와 농지, 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분산형 홍수저감 시설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빗물저장조 설치를 위해서는 빗물관리시설 설계 및 설치에 관해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역지역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에 최적방법을 도입하여 설치하고 그 후 기준에 따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지자체의 용수이용계획시 빗물관리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빗물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빗물관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빗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예 : 충남 물 통합관리본부)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에서 주도하여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빗물시설의 계획 및 설치 등을 담당,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기술적 추진방안

충남은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밀도가 높고, 고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중앙집중식 빗물관리와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상시 강

우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용·침투·저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여름철 집중강우 시에는 이러한 시설에 연결된 관거를 통해 월류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개발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 시가지와 신규개발지를 구분하여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예 : 기존 시가지의 경우는 중앙집중식 빗물관리와의 병행을 신규개발지의 경우는 분산식 빗물관리 추진 등 구분하여 적용)하다.

또한 지형에 따른 빗물관리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산지 및 초지 : 충남의 동남부 및 중앙지역은 산지와 초지로 많은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산지와 초지에서 빗물관리시설은 저류와 침투 2가지 형태 모두가 가능하며 콘크리트 등의 피복으로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자체에는 별다른 저해요인이 없으며, 오히려 타 집수시스템보다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산지와 초지의 빗물시설은 주변 지형과의 조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등장한다.

② 하천(하천변 집수시스템) : 충남의 하천은 6월부터 9월을 제외하고는 건천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천이 상당수이다. 하천의 건천화는 하천변을 따라 분포한 취락시설과 축사시설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수질의 악화 및 악취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온다. 따라서 하천변에 집수시스템(저류시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전원주택단지, 공공시설 등 건물의 지붕면(지붕면 집수시스템) : 충남의 경우, 생태도시 개념의 도시단지 및 각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혹은 전원주택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붕면 집수를 통한 유출 방지 및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 부족 대상지역의 경우 유역특성에 따라 적합한 빗물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불투수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유역형 빗물침투-저장시스템을, 투수층이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형 빗물침투-저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지하수를 충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수자원 확보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하수도계획 중 빗물배제계획에 우수 유출저감을 위한 빗물관리방법의 검토가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다. 빗물침투, 빗물저류, 특히 토지 이용의 계획적 관리가 우수유출저감수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하수관거의 정비에서 유출저감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로서 합류식 하수도의 강우시 초기우수나 월류수 대책, 도시비점오염 대책으로서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경제적 추진방안

우수세는 침투유량을 줄임으로써 도시 침투 예방, 지하수 함량 제고, 조세절감, 에너지 절약이라는 여러 성과를 안겨주고 있다. 이상의 우수세 도입을 통한 독일의 빗물이용 활성화사례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형건물과 공공건물의 경우는 일반 가정보다도

많은 우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공공기관과 대형건물주는 침투조와 같은 우수 배출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추가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면 보다 빗물이용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충남지역 중 동부지역의 경우 가뭄판단지수로 봤을 때 가뭄단계에 들어섰으며 물부족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서 충남 동부지역은 빗물이용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청남도에서 지원한 뒤 세액공제, 상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원주택단지 등 단지차원의 계획수립시 빗물저장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저장시설 설치가 완료된 건물 혹은 단지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기타 활성화 방안

빗물을 비상용수로 이용하는 방안,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로 확보·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체수자원으로 빗물을 인식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빗물의 면적 관리, 분산화 시스템의 실현 등을 위해서는 지역적 단위의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자발적인 민간의 참여유도는 빗물관리에 대한 관심고조와 나아가 국가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유역단위에

서 각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빗물이용을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송매체나 서적출판을 통하여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교육에서 물절약과 빗물이용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시켜야 한다. 더불어 충청남도에 환경교육센터 건립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빗물 관련 정책수립시 관련 업무내용이나 통계자료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빗물관리에 대한 업무내용이나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정보의 구축(지하수위, 토양의 종류, 토양포장도 등) 등 관련 자료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V. 맺으며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에 맞는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빗물관리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양특성,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빗물관리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 충남 사례지역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실증적인 대안제시가 병행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충남지역의 경우, 일부 도시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은 산지와 농지, 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분산형 홍수저감 시설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빗물저장조 설치를 위해서는 빗물관리시설 설계 및 설치에 관해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역지역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에 최적방법을 도입하여 설치하고 그 후 기준에 따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각의 site를 지정하고 빗물관리방안을 제시한 후 시범지역에 검증을 거치는 등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한무영 · 문정수 · 김충일, 2009, 다목적이고 적극적인 빗물관리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방안과 국내사례, 상하수도학회지
2. 법제처, <http://www.moleg.go.kr>,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3. 김이호, 2004,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우수저류 및 활용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과학기술부
4. 이태구, 2009,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빗물관리 방안, 2009 한국빗물협회 세미나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작성
6. 국토해양부, 2008, 빗물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과 저변 확대 방안 조사연구
7. 이상호, 2008, 우리나라 도시의 빗물관리의 개선 방향
8. 홍형표, 2007, 수자원으로서의 빗물관리 정책 추진방향, 제7회 국제빗물모으기 워크샵
9. IPCC, 2007b,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10. IPCC, 2007a,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11. Smith, K., 1992, Environmental Hazard, London, UK



충남마을기행

청양 가파마을

아름다운 언덕,

청양 가파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청남도의 알프스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연령대가 한 가족처럼 오기종기 모여 사는 칠갑산 자락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바로 ‘가파(嘉坡)마을’이다.

워낙 오지로 알려진 터라 필자도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큰맘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가파마을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호리병모양의 분지마을로 예로부터 ‘아름다운 언덕’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장승이 필자를 반겼다. 또 마을 주변에는 온통 고추밭이 즐비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은 심한 일교차와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는 천혜의 조건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세월을 걸친



〈청양고추밭〉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청양의 명물인 청양고추의 최대 생산지로도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마을로 유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유일한 마을이기도 하다.

마을에 도착해 대략 2시간 남짓 둘러보았다. 한참 봄철 농번기로 분주한 모습이 어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었으나 왜 충청남도의 알프스라 불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경치가 빼어나다. 한편으론 마을을 미리 둘러 본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이 마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광빈(55세)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예의라고 해두자.

●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이 마을에서 태어난 임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마을사업에 뛰어들어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농촌전통체험마을’을 시작으로 이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팜스테이마을’로 전격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농촌체험마을로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8년도부터 약4년간 공백기가 있었지만, 처음 시작하는



〈구기자 재배 시설〉

마음으로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마을 소득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빈 마을운영위원장〉

지난 해 체험객은 총3,116명이 방문하여 1억 6,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벌인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대전광역시에 곧 오픈하게 될 ‘가파원’이라는 농산물 판매장이다. 가파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은 가파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유기농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파마을이 인정한 농특산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가파마을의 주된 매출을 차지하는 절임배추와 김장 담그기 사업 등을 확장시키기 위해 1사1촌을 늘려나가고, 마을 바로 옆에 위치한 ‘안심사’와 연계한 사업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임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바



로 ‘가파 한대화 야구장’ 건설이었다. 바로 가파권역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야구장 건설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중이라는 것이다.

물론 임 위원장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 모든 일에는 마을 주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 하겠다. 바로 여기에 임 위원장의 고민이 있다. “현재 마을에는 총63가구가 남아있다. 젊은층의 참여가 절실한데 아무래도 농번기에는 저마다 농사일로 서로 바쁘다보니 도시에서 찾는 체험객을 제대로 맞기가 어렵고 다양한 마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주로 연세있는 어르신들이 도울 수 있는 두부 만들기, 승경도 놀이, 천연염색, 농촌체험(고추따기 등) 등에 한정해 진행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염색체험장으로 활용되는 폐교된 상갑분교〉



〈김장 담그기 사업〉

이에 대해 서울에서 96년도에 귀농했다는 한 마을주민은 “주민 소득 창출도 물론 중요하고 다양한 체험객을 맞이할 시설 건립도 필요하지만, 정작 마을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파마을의 가장 큰 가치인 ‘농촌다움’을 살리는 생산적 소비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마을주민의 연령대를 고려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화로의 전환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가파마을은 청양군 지역특산물인 청양고추, 구기자 등과 농산물 재배 및 수확 관련 농업활동, 소형 장승깎기, 두부만들기, 승경도 등 전통체험을 비롯한 쪽천연염색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은 상시·계절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를 두고 운영중이다. 그리고 체험객을 위한 음식 준비는 부녀회가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특히 ‘구기자 순나물 비빔밥’이 유명하다

마을을 찾은 체험객들의 입소문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인지 가파마을은 방송·신문을 통한 홍보 이외에도 주변사람들의 입김(?)도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마을 재방문을 기준으로 볼 때 10점 만점에 8점은 되지 않겠느냐고 임 위원장은 말한다.



〈두부만들기 체험〉



〈쪽 천연염색 체험〉



〈승경도 놀이〉



〈숫대 깎기〉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주로 당일치기 방문객이 많은 편”이라면서 “마을농가에서 직접 숙식을 해결하는 ‘농박’ 체험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언덕 마을인 가파마을에는 소위 ‘세 가지 아름다움(3嘉)’이 있다고 한다.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의 생태, 농촌체험을 통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1嘉’, 염색체험을 통한 ‘몸이 아름다워지는 2嘉’ 그리고 넉넉한 인심과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공동체의 따뜻함으로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3嘉’를 체험할 수 있다.

예쁘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듯 가파마을의 아름다움은 예쁨보다는 마을주민의 정과 평온함, 그리고 ‘농촌다움’으로 대체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만큼 거창한 사업이나 멋드러진 건물보다는 작은 경험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을의 모습이 필요하고, 체험객의 입장에서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그



〈전통문화전수관 앞 쉼터〉



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 줄 아는 여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시간에 쫓긴 농촌체험 서너가지보다 시골 논두렁을 걸으며 들꽃향기 음미하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말했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행복한 거라고...”

[청양가파마을 패키지 여행]

● 찾아가는 길



단체객의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족단위 방문이라면 내비게이션에 ‘가파마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다보면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은 꼬불꼬불 오르막도 있지만 곳곳하게 가면 된다. (대치초교에서 대치보건지소 방향으로 다리 건너자마자 좌회전한 다음 농소리 경유하면 상갑리가 나옴)

▶ 주소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243-1 (T.041-940-2401)

▶ 홈페이지 : <http://gapa.go2vil.org>

● 주변관광지

▶ 칠갑산

칠갑산은 해발 561m의 높이로 크고 작은 봉우리와 계곡을 지닌 명산. 주요 명소로는 정상, 아흔아홉골, 칠갑산장, 천장호 출렁다리, 장곡사, 정혜사, 자연휴양림, 도림사지 등이 있다. 특히 칠갑산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에는 산철쭉과 벚꽃으로 단장하여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천연림이 현대인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등 사시사철 등산객들에게 독특한 묘미를 전해준다.

▶ 2012 제13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 2012. 9. 7~9 (청양시장 일원)

청양의 대표 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청양고추장 보리밥 비벼먹기 ▲칠갑산 두부만들기 ▲다문화 음식 ▲약초밥 시식 등 향토음식 코너는 물론, 도시민들에게 이색 체험을 제공하는 ▲김치만들기체험 ▲금줄만들기 ▲구기자 족욕체험 ▲농산물 현장 수확체험 ▲청양요리체험 및 조리시범 ▲짚공예체험 ▲나무 곤충만들기체험 등도 인기가 많다.



언론을 통해 본 충남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과제

신상구 | 천안중학교 교사(국학박사)

1.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편승해서 문화요소가 상품화되고 문화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문화예술의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이란 다양한 문화적 제요소 즉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문화산업 범주 분류를 보면, 출판·음반·공연·영상(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방송·광고·관리운영업(박물관, 사적지)·게임 소프트웨어·대여점·자영예술가 등이 문화산업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각종 미디어에 담는 내용물인 문화콘텐츠가 디지털 혁명과 비즈니스에 의해 부가가치가 높아짐은 물론 무한 재생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영화감독인 스티븐 알랜 스피버그(Steven Allan Spielberg)는 <쥬라기 공원(1993)> 한편의 영화로 한국에서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했을 때 올린 수익금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영국의 작가인 조앤 롤링(Joanne Kathleen Rowling)이 지은 마법사 이야기인 <해리 포터> 시리즈는 1997년 1편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6편 <해리 포터와 혼혈왕자>까지 10년 동안 세계 64개 언어로 번역됐고, 3억 2,500만부가 팔려나가 책 판매 금액이 무려 3조 5,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최종편인 제7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은 발매 되자마자 초당 15권씩 팔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 경제에 연간 최소 5조 7,000억원(삼성반도체의 2006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액수)을 벌어들여 주고 있어



21세기 이야기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 정부에서 문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곳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2. 21세기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성장동력사업으로 각광받는 이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오스트리아 출생의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라고 말했다. 또 앨빈 토플러와 함께 대안미래연구소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짐 데이터(Jim Dator)는 ‘정보사회 다음에는 아이콘과 심미적 경험을 중시하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도래하는데, 그때가 되면 경제의 주력 엔진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과 창조성이 핵심 국가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지금 세계는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창조산업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삼았고, 미국은 2000년부터 창조산업과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했으며 중국도 2005년에 문화창의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문화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상품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홍보 마케팅, 문화도시 및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IT), 관광산업 등 타 장르와의 연계를 통한 무궁무진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3.6%로 산업평균 26.9%보다 훨씬 높으며 취업유발계수도 산업평균 10명보다 많은 12명에 달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21세기에 문화산업이 성장동력산업으로 떠오르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문화예술, 미디어, 관광산업이 연계된 창조산업이야말로 낙후된 도시



를 개혁하고 새로운 미래가치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구 20만 명의 영국 게이트헤드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중화학도시였지만 공장 이전 등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로 전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시 당국이 문화산업을 도시재생의 확실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미술관, 음악당, 디자인 및 설치작품 등을 통해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과 8조원대의 관광수익을 올리는 문화도시로 탈바꿈했다. 독일 뒤스부르크는 공장과 굴뚝으로 가득한 공업도시를 문화산업과 디자인을 통해 독일 내 손꼽히는 환경도시로 변모했으며, ‘반지의 제왕’ 뉴질랜드는 한 권의 소설이 영화, 게임, 캐릭터, 관광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연평균 관광객 5.6% 증가와 영상산업 146% 성장이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한국의 경우 남원은 최명희(崔明姬, 1947-1998) 작 <혼불>·<춘향전(春香傳)>·<변강쇠전>, 완주군은 <콩쥐와 팥쥐 이야기>, 보성은 <서편제(西便制)와 대나무>, 강진은 <청자(靑磁)>, 무주는 <태권도 이야기>, 천안은 민병달(閔丙達) 작 <능소전(綾紹傳)>, 아산은 <성웅(聖雄) 이순신(李舜臣)>, 금산은 <인삼(人蔘)>, 서천은 <한산 모시>, 보령은 <머드(mud)>, 봉평은 이효석(李孝石, 1917-1942) 작 <메밀꽃 필 무렵>, 음성은 <품바(pumba)>, 영동은 <난계(蘭溪) 박연(朴堧)>을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연천은 <전곡리 구석기 유적>, 춘천은 <마임(mime)>, 산청은 <허준(許浚)>, 합천은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부산은 <영화와 영상산업>, 거창은 <연극>, 청주는 <공예>, 평창은 <스키>, 안동은 <탈춤>, 함평은 <나비>, 제주는 <올레길>, 전주는 <한옥마을>을 각각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1세기 신산업의 쌀로 불리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부산·대구·대전·광주·경기·충남 등 6개 광역단체와 청주·전주·춘천·제주·목포·김해 등 6개 기초단체가 지금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어 신 성장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4. 충청지역 문화산업의 현황

2010년 현재 한국의 문화콘텐츠 사업체수는 11만882개이고 종사자수는 58만1,276명이며, 매출액은 72조1,201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가가치액은 29조7,971억 원이고, 부



가가치율은 41.55%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액은 32억2,609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6억 9,720만 달러에 달했다.

충청지역의 경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문화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문화산업 개발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충청북도는 비교적 문화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강해 2001년부터 그 특성에 알맞게 문화산업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2010년 기준으로 충청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2.4%(충북 0.7, 충남 0.7, 대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0년 충청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 니 메이션	방송영상 독립제작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합계	구성비
충북	106,511	5,779	50,459	44,667	62,619	3,713	925	1,317	104,090	30,422	23,426	357,919	0.7
충남	142,410	5,840	59,009	78,590	19,160	1,728	606	10,553	61,746	27,581	20,691	283,615	0.7
대전	227,714	9,747	56,600	90,799	38,814	1,527	1,050	23,980	113,195	39,011	26,826	492,620	1.0
전국	20,126,982	689,619	2,930,818	7,431,118	3,577,948	367,034	737,092	10,323,172	5,896,897	6,204,127	2,196,232	45,319,171	100

※ 구성비 : 서울 68.2%, 부산 2.2%, 대구 1.8%, 인천 1.4%, 광주 1.1%, 울산 0.5%, 경기도 18.3%, 강원도 0.5% 전북 0.6%, 전남 0.4%, 경북 1.0%, 경남 1.0%, 제주도 0.5%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콘텐츠산업통계』, 경성문화사, 2012. 3.12.p.58.

5. 충남지역의 문화산업 현황

충남일보 2007년 6월 1일자 “충남 문화산업 활성화 총력”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충남의 7개 문화산업(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교육 및 정보) 규모가 매출액 1,000억원, 조사자 648명으로 전국 대비 각각 0.5%에 불과해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입지계수 분석 결과 게임 · 소프트웨어 관련 · 영화 · 방송산업 등도 16위로 시 · 도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만 문화산업 창작 원천기반은 전국 대비 평균 이상이라고 한다.

2009년 말 현재 충남의 문화산업 업체수는 총 382개인데, 북부 지역인 천안 · 아산 · 당진 지역에 무려 185개 업체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간 문화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업종별 문화산업 업체수를 보면, 출판업이 90개로 23.6% · 광고업이 69개로 18.1% · IT업이 53개로 13.9% · 디자인업이 41개로 10.7%를 차지하고 있어 업체간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9년 말 현재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산업 업체 현황표

행정구역	업체수	비중(%)	행정구역	업체수	비중(%)
천안시	132	34.5	연기군	17	4.4
공주시	40	10.4	부여군	10	2.6
보령시	23	6.0	서천군	8	2.1
아산시	32	8.4	청양군	1	0.3
서산시	27	7.0	홍성군	14	3.7
논산시	16	4.2	예산군	12	3.1
계룡시	11	2.9	태안군	7	1.8
금산군	11	2.9	당진군	21	5.5

※ 市 지역의 사업체수는 281개로 73.4%, 郡 지역의 사업체수는 101개로 26.6%를 차지해 문화산업이 도시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하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료 :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그리하여 충청남도는 2006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문화산업 비전 2020을 추진해 온 결과, 2007년 5월 31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열악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목표와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문화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총예산 1,669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문화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기반조성단계를 거쳐 2015년까지 문화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권역간, 국가간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충청남도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프로젝트로 충남의 문화적 정체성 기반 위에 전통과 첨단을 결합한 문화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 인프라 구축과 문화디자인 산업 수익모델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와 체험의 도민 중심 문화진흥을 통해 산업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충남일보 2007년 8월 23일자 “충남도, 일본 문화콘텐츠 사업진출 활발”이란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은 2007년 7월 ‘서울캐릭터페어 2007’에 충남문화산업홍보관을 설치해 도내 기업들의 국내외 바이어들과 7건의 상담을 통해 약 90만불 정도의 수출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고, 2007년 10월 1일부터 2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아시아콘텐츠 마켓에 도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의 문화콘텐츠 상품을 전시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또한 천안신문 2007년 8월 27일자에 보도한 “천안, 문화콘텐츠 산업 메카 만들겠다”란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은 천안·공주·부여·연기·홍성 등의 지역을 4대 권역으로 묶어 지역에 시설·인력·R&D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구축,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2007년에 7회째를 맞는 사이버체전을 “2007천안 e-Sports문화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의 사이버체전과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 지역대학·시민·기업과 연계해 단순히 게임대회가 아닌 문화축제로 거듭나게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천안신문 2008년 3월 4일자에 보도한 “천안역 인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란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천안시가 천안역 인근의 문화동과 대흥동 일원 30만6,722m²를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지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천안역과 구도심을 연계, 문화산업이 집적화 되는 업무시설 및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도시형 문화광장을 컨셉으로 특성화해 천안시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대전일보 2007년 11월 28일자에 보도한 “문화·IT접목 황금알 낳는 거위 만든다”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충남첨단문화산업협력단(단장:김희섭)을 결성하고 첨단문화산업을 디스플레이, 농축산바이오, 자동차 부품산업과 함께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남첨단문화산업협력단은 충남첨단문화산업 분야와 관련한 충남지역 혁신 5개년 개발계획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한편 지역산업진흥산업인 충남영상미디어산업의 주요 정책인 기술 로드맵 작성 및 첨단문화 분야 인력양성 정책 수립, 중소기업 기술자문, 충남디지털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관련 산업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평가 등도 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07 충남디지털 콘텐츠페스티벌’에서는 충남지역 12개 대학 등에서 애니메이션, 영상물, 게임, 카툰 등 300여 작품이 출품돼 관심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

그리고 대전일보 2010년 11월 18일자에 보도한 “충남문화콘텐츠페스티벌 25일 팡파르”에 의하면, 2010년 11월 25일부터 3일간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충남의 첨단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문화콘텐츠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 이번 축제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술 우수작 전시회, 해외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유명 감독 초청강연, 지역기업의 콘텐츠 체험(3D 영상, 첨단 및 보드게임, 홀로그램 등), 난타공연 등이 다채롭게 꾸며진다고 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앞으로 충남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주도할 지역 대학의 학생들



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디자인, 게임 등의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고, 지역 대학 교수와 기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권 ‘3D 융복합 산업 발전위원회’가 발족을 위한 준비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충청권 지역의 3D 융복합 산업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황성엽 위원장이 충청투데이 2010년 11월 23일자에 기고한 “충남 문화산업 발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서 앞으로 충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문화산업 기관들이 형식적인 협의체를 지양하고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아이템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사업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충청남도가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16개 시·군의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문화산업군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충남일보 2012년 3월 19일자에 보도한 “천혜의 자연에 문화콘텐츠 입힌다 - 道, 문화, 생태섬 만들기 밑그림 작업 착수... 체류형 관광지 구축”에 의하면, 충남도가 충남 서해 섬들을 차별적 주제를 가진 자연생태 자원과 문화가 융·복합된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섬의 자연이나 전해지는 이야기, 인근 환경, 문화재 등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정신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보령 머드를 활용한 종합 미용 서비스, 인근 무인도를 활용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효 문화 복합 전시·체험 공간 조성, 비만 프로그램, 유배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해안의 도서지역을 건강과 치유, 체험 등 최근 추세에 맞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충남일보 2012년 3월 20일자에 보도한 “충남도, 문화로 행복찬 마을 만들기 시동 - 농어촌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대상에 청양·홍성·태안 선정”에 의하면, 충남도는 농어촌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대상에 청양 칠갑산 산꽃마을, 홍성 노은리 마을, 태안 대야도를 선정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시동했다고 한다. 실제로 청양 칠갑산 산꽃마을은 산꽃을 주제로 마을 주막과 영화동산, 극장, 대장간, 산꽃꾸러미 공작소, 산꽃문화대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 노은리 마을은 이 지역 출신인 최영 장군과 사육신 성삼문 선생을 활용, 탈놀이 공연단 구성과 이야기책 발간, 탐방길 및 예술인 문화공간 조성, 역사문화축제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태안 대아도는 천상병 시인의 가옥이 위치한 점을 십분 활용해 자연과 문학을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바다 체험 전망대 운영, 전통 낚시배 진수식, 마을 도서관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해 해양관광휴야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튼 충남이 전통문화소재인 백제문화에 IT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애니메이션과 영화, 게임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충남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당면 과제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문화산업이 21세기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 다투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이제 문화산업의 물적 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본다.

그런데 아직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스토리텔러들을 많이 양성하지 못해 문화산업은 투자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혈세를 낭비하는 별 볼일 없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문화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교육, 문화예술교육, 창조교육을 강화하여 역사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성이 강한 유능한 스토리텔러들을 많이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제 경쟁력이 있는 문화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단편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성이 강한 유능한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창조적인 스토리텔러들을 많이 양성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중심의 탐구식 교육을 강화해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추도록 하여 다른 나라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이 강한 문화상품들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나가는 말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충남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충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운영이 미숙하여 비교적 문화산업 개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0년 현재 충남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283,615백만원으로 전국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45,319,171백만원의 0.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충남은 2007년 11월 27일에 충남첨단문화산업협력단을 결성하고 첨단문화산업을 디스플레이·농축산바이오·자동차 부품산업과 함께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충남지역이 문화산업을 보다 발달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충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은 전반적으로 지적 창의력에 기반한 예술·비즈니스·기술이 융합된 창조산업의 발전과 동반·성장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서비스사업·문화·교육 관련 창조산업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남지역이 백제문화권에 속하는 만큼 충남지역의 문화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잘 활용해 각 시·군 별로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충청지역의 3개 지역이 문화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때 타 지역의 문화산업을 앞 설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충청지역 3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익을 올리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문화산업체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관내 문화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창조한 사람의 땅 네덜란드



권영현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은 세상을 창조했고 네덜란드 사람은 땅을 만들었다.” 구태와 속박을 등지고 자유를 향한 사람들이 대륙의 북쪽 끝 불모지에서 땅을 늘려가며 신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 강대국의 간섭과 지배, 세계의 해상권을 갖기도 했고 다시 모든 것을 잃는 역사의 부침 속에서 당차고 알뜰한 선진 복지국으로 우뚝 선 나라. 디자인 선진국이기도 한 네덜란드와 도시브랜드의 대표사례인 암스테르담의 디자인 정책에서 도시 이미지 만들기를 살펴본다.

암스테르담의 가치

① 흔적의 가치, 전통 건축물

암스테르담은 13세기 경 어민들이 암스텔강에 독을 쌓고 정착하기 시작하여 네덜란드가 세계의 맹주였던 17세기 무렵, 도시확장계획에 의해 높지였던 이곳의 물을 빼고 개간하면서 지금의 도시 모습이 이루어졌다.

암스테르담 구시가지의 전통 건축물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서로 닮은 모습에 비슷한 높이의 수많은 박공 구조의 건물들이 지금은 암스테르담을 특징 지워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석재를 사용하는 유럽의 여느 도시와는 달리 이곳의 건축물은 벽돌이 주재료로 이웃 건물과 공간 없이 어깨를 마주하며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 양식과 배치는 석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과 지반이 약해 단독 건축물로는 지지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었

다고 한다.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건물이 좌우 또는 전면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마저도 암스테르담의 고유한 정취를 더해주는 매력적인 요소로 더해지고 있다.

② 그림의 가치, 자전거와 트램

고풍스런 도시 건축물이 암스테르담의 정적인 기반이라고 하면 그사이를 유연하게 흐르고 있는 자전거와 트램(굴절버스)은 도시의 살아있음을 발산하는 동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광장 옆 대규모 자전거 보관타워〉



〈주요교통수단인 트램(굴절버스)〉

특히 자전거는 네덜란드의 도시 특성을 지워주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암스테르담만 하더라도 중앙역 광장 옆에 위치한 3층 규모의 자전거 주차타워에 꽉 채워진 자전거에서 보듯이 자전거의 생활화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27%로 전 유럽에서 가장 높아(덴마크 19%, 독일 10%), 자전거 도시로 널리 알려진 코펜하겐이나 벨리브(Velib)의 도시 파리를 압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의 원조 도시답게 자전거 보관 시스템도 선보이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트램-차도-보도-자전거 도로로 구성돼 있다. 도로 중앙에 트램 차로가 있고 양옆으로 차로가 있다. 차로 다음에는 차로 넓이의 1.5배인 보도가 이어지고, 도로 맨 끝으로 1차로 넓이의 자전거도로가 있다. 결국 차로는 전체 도로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도로 건설목

에는 자전거와 보행 횡단로가 각기 분리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등과 자전거용 신호등이 따로 있다. 자전거용 신호등은 위쪽과 아래쪽에 신호등을 각기 달아놓았는데 아래 신호등은 자전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설계된 것이다.

차로와 자전거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우선이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차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자전거가 우선 출발하는게 규칙이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라 연수 내내 자전거 도로에서의 안전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

우기도 했다.

자전거와 트램은 도시의 살아있는 리듬을 보여주는 바로메타인데, 우리의 도시처럼 자동차로 인한 속도감이 없으면서도 여유 있는 느낌과 함께 건강한 도시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③ 열린 가치, 도시의 동맥 운하

암스테르담의 관광은 운하에서 시작하여 운하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암스테르담을 연결하는 주요 네트워크는 도로가 아닌 거미줄처럼 연결된 운하이다. 운하 구역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수립된 새로운 항구도시를 위한 프로젝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운하 구역은 유서 깊은 구 시가와 이를 둘러싼 중세 항구의 서쪽과 남쪽 운하망으로 구성된다. 네덜란드 황금기에 도시의 요새화된 경계부를 안쪽으로 감싸 안고 도시 외곽 경계지점이 된 ‘싱겔 운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해와 이어지는 운하는 지금도 수운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선상주택(선박을 고정시켜 놓은 형태와 수중에 기초를 설치하여 주택을 올린 수상가옥 형태가 있음)이 이색적인 운하의 도시임을 보여준다. 도시의 곳곳과 70여개의 섬을 이어주는 500여개의 고풍스런 다리를 한자리에서 올려다 볼 수 있는 유람선 크루즈가 관광자원화 되어 있다.(최근에는 한국어 안내 멘트가 시작됨)



〈운하크루즈〉

회화예술의 부흥지

네덜란드에는 산업, 스포츠 등 두드러진 위세에 가려 드러나지 않는 자산이 있는데 바로 회화 예술이다. 알프스 남쪽 지역에서 르네상스가 한창일 즈음, 북쪽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프랑드르에서는 회화예술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우선되는 공헌은 이곳 프랑드르를 기반으로 하는 플레말레 화가와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에 의해 유채(油彩/유화)가 발명된 것이다. 유채의 발명은 이제까지의 프레스토나 템페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층 진보된 표현수단을 마련해주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주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6세기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여파로 북부지방이 독립국가인 네덜란드로 출발하면서 네덜란드 회화는 이탈리아적인 요소를 천천히 조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시기의 네덜란드 회화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전통적인 종교적 주제를 보완하여 ‘레퍼토리’를 부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회화 주문이 점차 드물어지게 되자 서민들의 세속적인 취향에 호응하면서 풍경화, 정물화, 세속화가 비로서 유행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성상파괴 열풍이 널리 퍼져있었음.)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인상주의 회화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컬렉션을 모아놓은 반 고흐 미술관과 마주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립미술관(RIJKS MUSEUM)에는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회화 작품 등이 250개의 전시실에 5,000점이 넘게 전시되고 있다.

네덜란드 회화의 모태가 되는 15세기 이탈리아 회화인 피에르 디 코시모, 베네치아파 화가인 카를로 크리벨리의 작품과 15세기에서 16세기 교회의 제단을 장식했던 반 오스트사넨의 패널화, 메너리즘 회화, 초상화, 카라바지오를 추종하던 위트레흐트의 화가들인 브루겐, 회화의 황금기인 17세기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가 전시되고 있으며, 얀 반 고이엔, 초상화의 거장 프란스 할스, 피터 폴 루벤스, 빛의 화가로 불리는 최고의 거장 렘브란트 반 리진의 ‘야경’ 등이 전시되고 있다.

자원의 상품화

① 잔세스칸스(Zaanse Schans)

암스테르담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잔 강변에 위치한 마을인 잔세스칸스는 풍차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민속촌이다. 이 마을은 네덜란드의 명물인 풍차가 들어선 17~18세기 풍의 목조가옥과 방목되는 양들로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광경은 플랑드르 화가들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목가적인 소재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모습이다.

풍차가 제재나 안료 가공의 동력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18세기에는 이 곳에 700개가 넘는 풍차가 있었으나 산업혁명의 기계화에 밀려 지금은 관광용으로 몇 곳만 남아 있다.

강에서 조금 떨어진 나막신 관광기념품상점에서는 연식이 꽤 되어 보이는 프랑스제 목공기계를 이용하여 나막신을 가공하는 장면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목장 앞에는 현지에서 만들어진 치즈와 우유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낙농제품상점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즈 만드는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풍차마을의 운영은 지역 농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영농조합 형태로 각기 경작이나 목축 가공, 판매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기념품과 낙농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레이스 고깔모자와 나막신 등 네덜란드 전통의상을 갖춰 입은 판매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큐켄호프 꽃축제의 튤립〉

② 유럽의 봄 큐켄호프(Keukenhof)

암스테르담에서 약 18km 떨어진 리세(Lisse)에 있는 큐켄호프 공원(32헥타르/96,799평)에서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큐켄호프 꽃축제가 열린다. 큐켄호프 꽃축제는 네덜란드의 주요 생산물인 튤립을 주제로 화훼산업의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데 매년 이 기간 동안 백 만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네덜란

드를 방문한다고 한다.

이 곳은 15세기경에 백작 부인인 자코바 반 바이에렌(Jacoba Van Beieren) 소유지의 일부로 연회를 위한 식재료(채소, 허브, 사냥감)를 공급하는 장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부엌(keuken)을 공급하는 정원(hof)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이름인 큐켄호프(keukenhof)을 갖게 된 유래가 되었다.

꽃 축제를 시작한지는 60년이 되었으며, 올해는 'Heart of Europe Poland' 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튤립이 만개하는 3월말에서 5월말 사이에는 큐켄호프 최대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시기로 6백만 송이의 튤립과 히아신스, 수선화 등 엄청난 규모의 구근 화훼류와 아름다운 관목이 발산하는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찬다.

안면도꽃박람회를 두 차례 치른 우리로서는 관심이 많은 장소로 기존의 정원을 기반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었으며, 인공물이나 인위적인 구성에 의한 전시연출 보다는 강과 나무와 잔디, 호수 등 본래의 자연 여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시되는 화초의 품종의 표기뿐 아니라 주제어를 부여하여 표시한 점도 발상이 돋보였다.

꽃 전시 이외에도 설치예술,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지며 올해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이동식 자동 연주기가 네덜란드 민속음악을 연주하고 관람객들(특히 노년 부부들이 많음)이 호응하는 등 주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③ 하이네켄 체험전시관(Heineken Experience)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중 하나인 하이네켄 맥주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암스테르담 광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체험관은 1867년에 세워져 1980년대 말까지 양조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관광객을 위한 체험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이네켄은 1863년 게라드 아드리안 하이네켄에 의해 설립된 맥주 제조회사로 그때까지만 해도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맥주유통을 대량생산 및 유통으로 이끌어낸 계기를 이끌어냈다. 하이네켄 맥주의 독특한 풍미는 특유의 효소에 있는데, 1866년 루이 파스퇴르의 제자인 엘리온 박사가

에이-이스트(A-Yeast)배양에 성공한 뒤 저면발효(Bottom-Fermentation)를 활용한 양조기법으로 현재까지 하이네켄의 독특한 맛을 이어오고 있다.

이 체험관은 입장 때에 단추가 박힌 고무 팔찌를 채워 주는데, 단추는 관람도중과 마지막 코스인 시음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시 콘텐츠는 하이네켄의 역사(용기, 라벨, 유통 방식 등), 초기에 사용되던 설비 등 고풍적인 요소와 4D 동영상(움직이는 관람석, 물 분사)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결합되어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콘텐츠가 눈길을 끄는데 네덜란드의 경관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준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맥주병 기념품 등은 관람객의 호응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초기에 사용했던 발효조〉

④ 큐브하우스(Cubic House)

네덜란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렘 쿨하스 등 수많은 현대 건축가들을 배출한 곳으로 많은 건축 학도와 건축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지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곳이다.



〈큐브하우스〉

로테르담 블라크 역 앞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기괴하기도 한 일련의 건물 군들을 만날 수 있다. 건축가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조성한 일종의 새로운 발상을 실현하는 건축 전시장인 곳이다. 그중 대표적인 큐브하우스는 1984년 해체주의 건축가 피트 블룸(1934~1999)의 설계로 만들어진 집단 주택으로 육교와 같은 사각기둥 위에 정육면체가 45도 기울어진 채 벌집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축이다. 모두 38개의 작은 큐브와 2개의 대

형 큐브, 14개의 상점이 서로 맞물려있는데, 실제 주민이 거주하며, 일부는 관람(유료)용으로 쓰여 지기도 한다. 큐브 내부를 살펴보면 3층까지 관통하는 중앙의 나선형 계단으로 아래층부터 연결되며 각 방들이 배열되어 있다. 1층은 거실과 식당, 2층은 서재, 침실, 욕실, 3층은 온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외리포트

건축가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발상도 대단하지만 건축가들의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를 시민들이 기꺼이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서와 풍토가 새로움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터전을 이루고 있었다.

도시 이미지

① 옥외광고물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유럽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업의 간판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설치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상가 건물의 복합용도(1층은 상점, 2층은 사무실, 3층 이상은 주거), 지번으로 목적지 찾기, 한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 등으로 큰 간판이 필요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상공업자체인 시민에 의해 형성된 국가로 상공업자의 동업자 조직인 길드의 강령에 따라 동종 점포의 개설 등 과당 경쟁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부 강령은 취급 품목 등 업종의 선택은 물론 간판의 부착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와 같은 간판 경쟁 양상을 볼 수가 없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중세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로 지금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는 규제로 인하여 간판의 규모나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종에 따라 기준 이상의 면적이나, 수량, 형태나 돌출간판과 같은 부가 간판을 부착할 경우 시당국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간판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간판을 부착하기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② 도시디자인 정책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상업 및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마케팅 관점의 디자인 수준과 활용이 매우 높고 활발한 국가이다. 네덜란드의 디자인 경향은 국가의 형성과정과 영악한 자연환경에서 기인하는데 장식적인 요소나 부가적인 기능을 최소화하는 실용주의와 단순주의/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지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공디자인의 효용가치를 일찍 부터 인식하여 개발하고 실현하였다. 이제는 범용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시설의 안내 유도 사인 시스템의 효시도 1963년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의 안내사인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경직될 수 있는 관공서(경찰서, 소방서) 등의 이미지를 과격적으로 변신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과 호응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 시의 이미지 정책은 300년전의 역사적인 가치와 DNA를 찾아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여 중세도시와 현대도시의 두 얼굴의 균형을 이루며, 경제, 사회적 이익을 겨냥한 정부 지원 및 보조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IJBURG 전경〉

이러한 신구의 균형정책은 자전거 이미지로 대표되는 친환경 도시이면서 자원재생을 통한 클린, 그린도시, IJburg프로젝트(수변 공동체 주거지역 조성계획으로 시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참여)진행에서도 이미지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브랜드인 Iamsterdam 브랜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 대신 시민 참여, 공연 등을 통한 홍보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의 암스테르담 도시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시내의 중심광장에 입체 조형물을 조성하여 별 다른 비용 없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최근 1개 뿐인 조형물의 호응이 높아지자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절제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선진국 문턱에 서서

추방당한 유태인과 아랍인, 프로테스탄트, 실리를 추구하는 상공인들이 만들어 낸 국가, 기괴하고 환상적인 세계를 그려낸 히에로니무스 보스, 동성결혼 합법, 공장제도, 마약(Soft Drug)의 허용과 같은 선입견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창의력과 더불어 실용성에 기반하는 절제의 균형이 바로 네덜란드의 실질적인 이미지이다.

보잘것없는 삼류국가가 세계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인종, 종교,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고와 창의력, 실용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능있는 외국 이주민을 영입한 열린 정책은 네덜란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상대존중과 실용성은 우리의 10배 규모의 대외공공개발원조나 복지, 공공재의 비중과 수준, 교통수단과 주거형태, 신구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미지 정책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20-50 클럽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바로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전반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충청 표심과 정치 발전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충청권 표심의 특징은 절묘하다. 첫째, 견제와 균형이다. 19대 총선에서 충청 의석은 여, 야 12 대 10으로 양분되었다.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면서 부침 속에서도 지역정당의 명맥을 놓지 않던 대로 지역정당에게도 3곳은 남겨 주었다. 충남은 새누리 4: 민주 3: 선진 3으로 황금분할되었다. 59.2% 전국 최고 투표율의 최대 격전지 세종시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소속 정당이 나뉘었다. 교육감은 보수성향 후보가 네 명으로 분산되었음에도 보수성향 후보를 당선시켰다. 17대 대선에서도 충남의 후보별 득표율은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34:33:21%였다.

둘째, 판단 준거의 독특성과 일관성이다. 충청이 권력의 변방에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정당 몰표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집권세력으로 편입되면 특정 정당 독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특정정당 바람과 분할 구도의 양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청지역이 여야, 영호남 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14~16대 대선에서 충청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연속 당선시킨 힘의 원천이 되었다.

셋째, 실리적 유연성과 유동성이다. 충청 유권자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와 선거결과가 다른 지역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정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일찌감치 뚜렷하게 감지되었다. 선거 결과 1988년부터 이어져 온 지역정당의 존폐를 전망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19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정치 틀에서 볼 때 현실 가능성이 없던 일들이 현실화되었다. 재외국민투표, 국민참여경선, 모바일투표, 청년비례대표 등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지역주의 극복형 중복입후보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의원제인 한국형 석패율제를 검토하면서 여야가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순기능을 인정했다. 영호남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

다는 상징이 될 만한 당선자는 많지 않았지만 지역주의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그리고 17대 총선부터 지역정당의 지역 득표율이 30% 이하로 하락하면서 지역주의가 이완되기 시작한 충청에서 지역정당이 패했다.

지역주의 해소는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선결요건의 하나이다. 영호남의 패권지향적 지역주의가 철용성으로 남아있지만 3김 이후 지역주의의 변화와 2002년 이후 이념투표 및 세대투표의 등장으로 지역 패권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17대 대선 당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충청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와 관심 이슈는 호남,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과 달랐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별로 이전과 뚜렷하게 달라진 투표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남에서는 무소속이었지만 친노인사가 당선되었고, 부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낙선했지만 44.6%나 득표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10%대로 득표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있었다. 민자당 3당 합당으로 지역주의 정당정치 체계의 기초가 된 PK, TK 정치적 연대의 균열 조짐이 극미하나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대 총선에서의 충청 지역정당의 패배는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 직전 한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40%가 넘었다. 총선 이후에도 세종시 건설의 방향과 완성도, 지역정당의 조직 재정비 정도, 대선을 앞둔 보수 연합 가능성 등 가변적 요인들이 지역정당의 향

방을 가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정당이 위축된 당세를 회복하고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당명 변경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출신지 중심의 “정서적 지역주의”를 거주지 중심의 “정책적 지역주의”로 전환하는 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정사상 첫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 탄생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당적은 버리지만 150석의 여당 출신이다. 충청 표심이 지역정당의 구조적 한계를 실감하고 출신지 중심의 “정서적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지역정당에 제동을 건 직후이다. 지역에서의 정치적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개원과 더불어 정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과 중복논쟁, 대선 정국 관리, 국회선진화법 적응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운영의 난제들도 풀어야 한다. 한국 국회는 다수제와 합의제 원리가 혼용되고, 원내교섭단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활동이 마비된다. 대통령, 시민단체, 노조 등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해 국회의 자율성도 약하다. 현정사상 첫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 역대 선거에서 보여준 충청 표심의 뛰어난 견제와 균형감각, 판단 준거의 일관성, 실리적 유연성과 유동성을 십분 발휘해 한국 정치발전의 초석을 놓기를 기대한다.

꽃처럼 꿀벌처럼



성기훈
중도일보 상임고문

신부예겐 꽃처럼 신랑예겐 꿀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 꽃은 시들거나 벌레 먹은 꽃이 아니라 언제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며 향기가 나는 꽃입니다.

또 하나 꽃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꿀이 있지요. 여기서 꿀은 부부 간의 금실과 가정경제를 나타냅니다. 이 꿀을 사랑하는 꿀벌과 함께 알콩달콩 먹으면서 사랑을 꽃피우고 집안 살림도 키웠으면 합니다.

신랑예겐 꿀벌처럼 살라했죠. 꿀벌은 부지런함의 대명사죠.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 위에 성실하고 무엇보다 조직적인 생활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남편과 아내의 특징이나 능력을 꿀벌과 꽃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꽃과 꿀벌의 관계입니다. 꿀벌이 부지런하다 하나 일할 터전 꽃이 없다면 그 부지런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꿀벌이 없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도 빛이 바랄 것입니다.

여기서 꿀벌과 꽃은 상생(相生)관계에 있는 것이죠. 내가 있음으로 당신이 존재하는 것,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 말입니다. 부부는 이처럼 공생 공명 관계임을 명심하고 꽃과 꿀벌과 같은 관계로 아름답고 건강한 평생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례가 땀질 주례

앞에 예시한 주례는 자주 인용한 것으로 5분 이내의 분량이다. 덕담 위주로 '잘 살아라' 당부 하는 식이다. 2001년부터 횡수가 부쩍 늘어나 현재까지 1,500건에 육박하다 보니 아마추어 수준은 벗어난 것 같다.

1985년 5월 어느 일요일 아침, 전화벨이 나의 단잠을 깨웠다. 팔을 뻗혀

전화기를 귀에 댔더니 “저 ○○인데요. 오늘 낮 제 여동생 주례 좀 서주셔야겠어요.”하는 게 아닌가? 이 무슨 날벼락. 주례를 서달라니... 그것도 5시간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땀질 주례를... 순간 나는 당황했다. 주례를 서 본적이 없으니 더했다.

한참 줄다리기를 하다가 허락하고 목욕탕으로 달려갔다. 주례를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목욕하는 버릇은 이때부터 생긴 것 같다. 인생의 새 장을 여는 커플에게 혼례식을 집전하는 책임자로서 육체와 정신을 정갈하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메모지에 주례사 내용을 빼곡히 썼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주례석에 섰다. ‘아뿔싸’ 메모한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순간 머릿속과 등에선 식은땀이 도랑을 이루었다. 주례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다.

나의 땀질 첫 주례는 이렇게 끝이 났다.

미혼여성 실속 챙긴다

몇 해 전 D일보가 연애와 성에 대한 특집을 다뤘다.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남자의 외모와 경제력 중 어느 쪽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서 90%가 경제력 쪽에 줄을 섰다. 외모에 관심을 두는 것은 중고생이나 소개팅 때나 있는 일이고 결혼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결혼은 현실이라는 실리적 계산이 우세했다.

여성들의 결혼 상대에 대한 실속 챙기기는 경제력 탐색뿐만 아니라 상대의 성적 능력에도 적극적(59%)이었다. 미혼 여성의 성 가치관과 결혼관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실리적,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성격이나 성 문제 등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살아온 우리나라 부부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것이란 것은 어렵פות이 인지되어 왔던 것.

행복가정재단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행복 부부지수는 100점 만점에 65.8점으로 우리나라 남성은 어릴 때부터 부지불식간에 점잖고 무게를 잡는 스타일로 성장해오지 않았나 싶다. 어쩌다 공연장에라도 가보면 여자들은 웃고 울고 들뛰는 등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석고상 같은 표정으로 자리지킴이가 되는 것을 보면 성장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여성의 경우도 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망측스러운 일이기에 오랜 세월 안으로 새기거나 참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길들여져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애관계와 태도에서의 성차(性差)의 보고(연세대 심리학과 주현택 교수)’를 보면 혼전 순결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혼 여성들의 결혼관이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세대의 급속한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부는 비익조와 같아

옛날 ‘비익조’라는 총각새가 살고 있었다. 이 새는 한쪽 눈과 한쪽 날개가 없는 불완전한 새였다. 온전치 못하니까 하늘을 훨훨 날 수도 없었고 세상 구경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늘 수심 속에 보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한 처녀 비익조가 나타났는

데 이 새 역시 한쪽 날개와 눈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새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이 온전치 못한 암수 비익조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하나로 합하고 보니 두 개의 날개와 두 개의 눈을 갖는, 보다 완전한 비익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부란 불완전한 비익조의 만남 같은 그런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제대로 된 것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존재이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사람은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도 큰 길도 부부가 품고 있는 것이다. 부부는 각기 제자리에 서 있을 때보다 서로에게 다가설 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다른 것이 많은 남녀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면서 온갖 고락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즐기는 것에서 말투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보면 부부라는 것이 경외롭고 신비롭기만 하다.

이 같은 금실 좋은 부부 관계가 결혼 언약에 의해 당연히 주어지거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분을 2인3각처럼 서로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면 그렇게 좋은데, 왜 그곳엔 짙은 먹구름이 자주 끼고 태풍과 눈보라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것일까?

미국 코넬대 심리학자 하산 박사가 37개 문화권 5천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열정적 사랑의 유효기간은 18~30개월이었다는 것. 사랑에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렸는데 말이다. 그것은 혈액에 욕정을 일으키는 뉴트로핀 호르몬이 소멸되고 대신 상대방을 귀엽게 여기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늘어났기 때문이란단.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서로 똑같은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되니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갈등을 부르고 서운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혜로운 부부, 그렇지 못한 부부가 생긴다. 부부는 성장과정이 다르고 몸속에 흐르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집에 살 때 다투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씹씹이가 헤픈 남편에게 자린고비 아내의 견제가 필요하고, 급한 성격의 아내에게 느긋한 성격의 남편이 제 격이라는 것.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을 내세워 헐뜯고 홍보는 등대립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조절하고 중재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의 유무가 정말이지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 간 의견이나 행동이 엇갈릴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즉 해선 안 될 말이 있다.

첫째, 평가형과 멸시형 언어로 ‘형편없어’, ‘왜 그 모양이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등은 기분 좋을 때라도 입 밖에 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둘째,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 배우자 가족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 셋째, 책임전가형(너 때문) 벽 쌓기형 등이 이에 속한다.

반대로 부부가 경쟁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가려서 한다. 둘, 언쟁을 할 때 저주는 미덕을 발휘한다. 셋, 습관적인 스킨십에 힘쓴다. - 출퇴근 시 가벼운 입맞춤하고 함께 다닐 때 손잡고 칭찬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하면 된다. 넷, 잠잘 땐 반드시 같은 침대에서 잔다. 다섯, 사랑은 즐겁게 한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하는 사랑은 몸에 독이 되니까.

충남 최초 '항만발전 종합계획' 확정...부가 가치는 15조원 목표

충남 최초 '항만발전 종합계획'이 나왔다. 2040년까지 도내 항만 총 물동량을 6억톤으로 높이고, 부가가치는 15조원으로, 종사자는 45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도는 5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핵심 항만지역 구축'을 항만발전 중·장기 비전으로 정했다. 목표는 2010년 1억1,700만톤인 충남 항만 총 물동량을 2030년 3억9,500만톤으로, 2040년에는 6억톤 향상으로 잡았다. 도내 물동량 처리 비중을 현재 10% 안팎에서 2030년 17%로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만 부가가치는 2009년 2조원(추정)에서 2030년 9조원으로, 2040년에는 15조원으로 높이며, 항만산업 종사자는 2009년 4만6,000명에서 2030년 25만명, 2040년에는 45만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항만개발의 지역경제 성장동력화 항만의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해양관광산업진흥 및 항만 친수성 강화 ▲항만 개발·관리운영 시스템 선진화 등을 4개 전략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로 세웠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항만개발의 지역경제 성

장 동력화 분야에서 ▲항만SOC 적기 개발 및 확충 ▲배후수송로 확충 및 연계성 강화 ▲당진항 송산지구 공용부두 개발 ▲세종시 관문 인프라 확충 등을, 항만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분야에서는 ▲에너지산업 지원 및 항만특화 개발 배후 물류단지 확충 ▲전국 광역준설토 투기장 유치조성 ▲복합산업단지 구축 ▲물류창고시설 구축 ▲연안 해송 활성화 유도 ▲화물차 전용 복합휴게소 조성 등을 내놴다.

또 해양관광산업 진흥 및 항만 친수성 강화 분야는 ▲항만 내 친수공간 확보 ▲항만재개발 및 시설 활용 ▲여객부두 이용 활성화 등을, 항만개발·관리운영 시스템 선진화 분야에서는 ▲항만 거버넌스 재설계 및 법 제도 개선 ▲항만 운영시스템 효율화 ▲대외교류 협력기반 구축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사업은 국가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따라 순위를 정해 추진, 서해안 물류 중심 항만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법정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의 장기계획으로서의 한계와 충청권 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고려, 충남에 특화된 장기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앙 공모’ 18개 사업 184억 선정

– 상반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의 달’ 행사 10억 등

충남도는 올 상반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앙 공모사업에 ‘문화의 달’ 등 18개 사업 184억원(지방비 포함)이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정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분야 8개 사업 25억원 ▲체육분야 6개 사업 124억원 ▲관광분야 4개 사업 35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은 ▲2012년 문화의 달 행사 10억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30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100억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2억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 조성 1억6,000만원 등이다.

이 중 오는 10월 19~21일 서천 금강하구 및 장항 물량장·신성리 갈대밭 등에서 열리는 2012년 문화의 달 행사는 ‘자연예찬(自然藝讚)’을 주제로, 특별 테마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지역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홍성 문화생태탐방로(홍주성 천년 여행길)는 홍성역과 홍성 전통시장, 홍주성 등 8.5km를 이어 관광상품화 하며,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은 천안 흑성산 일원과 보령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18개 184억원의 공모사업 선정은 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의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통해 일군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광역 생태지도’ 2013년 완성

– 광역생태네트워크 및 비오톱지
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지도(비오톱)가 2013년 모두 완성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초 자치단체는 향후 추진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본 생태지도 내용을 반영해 입안단계부터 환경보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5월 16일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용역과 생태지도 작성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목표는 충남지역 생태의 골격인 산맥(금북, 금남정맥)과, 금강을 비롯한 주요하천, 바다와 접한 서해연안부에 대한 광역생태축 구축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도내 시군에서도 자체 관할구역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 보고회는 도와 시군이 추진한 광역 생태네트워크구축 연구용역과 비오톱지도 제작 용역에 대해 중간 점검하고, 가치 있는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군 공무원과 용역 수행자인 충남연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도에서는 추한철 환경녹지국장과 최진하 환경정책특보 등 환경정책부서 관계공무원이 참여했고, 시군에서는 생태지도(비오톱)제작 및 야생동·식물 담당자가, 충남연에서는 환경생태연구부장 및 관계 연구원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추한철 국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 온 광역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지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어떤 곳을 보전하고, 어떤 곳을 과감하게 개발해야 할지 합리적인 기준을 갖게 됐다”며 이번 사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 동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태환경을 외면하면서 개발해 왔다면 이제는 가치 있는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적개발로 탈바꿈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뭄·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점검

—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당면사항 전달·토의 등 진행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가뭄 대책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구본충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16개 시·군 부시장과 부군수, 도 실·국·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토의와 당면 사항 전달, 시·군 건의 및 협조사항 설명, 행정안전부 회의 내용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과 ▲하절기 감염병 대응전략 및 감시체계 강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상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가뭄극복 대책 추진 철저 ▲생활용수 가뭄대책 추진 ▲도청이전 범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 협조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 철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철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 철저 ▲장마철 가축매몰지 관리 강화 ▲폭염 종합대책 추진 등이 전달됐다.

시·군 협조사항으로는 ▲‘2012 당진 해와달의 만남&바다불꽃축제’ 개최(당진시) ▲‘2012 금강민속축제’ 개최(금산군) ▲춘장대해수욕장 개장(보령시) 등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구본충 부지사는 “이제 장마가 예보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가뭄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총력 대응 태세를 늦추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구 부지사는 또 ▲여름 휴가철 ‘우리고장에서 휴가보내기’ 홍보 협조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 철저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철저 ▲하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철저 ▲물놀이 안전 등 휴가철 안전대책 강화 등을 당부했다.

충남도 ‘착한 식당’을 찾아주세요!

- 지역 최초로 로컬푸드 외식업체 발굴 공모... 7월 27일까지 접수

충남발전연구원은 도내 지역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우수 외식업체 발굴 공모를 7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착한 소비를 응원하는 착한 식당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는 지역의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최초로 시행하는 ‘외식업 로컬푸드 인정제도’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의 참가대상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외식업체, 소규모 유아시설, 제과점 및 도시락업체 등이며, 음식의 주재료와 부재료의 생산지역이 운영업체 소재지 혹은 근교 농수산물로

CDI 충남발전연구원

착한 소비를 응원하는
착한 식당을 찾습니다 접수 5.30- 2012. 7.27



써 최소 60% 이상 지역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7월 27일까지 ‘로컬푸드 외식업체 신청서’를 충청발연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최종결과는 서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및 공지할 예정이다.

유학열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은 “이번 로컬푸드 외식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충남 로컬푸드 대표명칭 사용 ▲충남 로컬푸드 외식업체 상징디자인 제작 및 홍보 지원 ▲로컬푸드 외식업체 협의회원 자격 부여 ▲지역농산물 직거래 및 공동구매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도내 ‘착한 식당’을 운영하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충청발연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T.041-840-1215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17주년 기념행사 개최

— 〈돈의 맛〉 임상수 감독 초청 특강,
기념세미나도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14일(목) 오후2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개원17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던 영화 〈돈의 맛〉의 ‘임상수 감독’을 초청해 가진 “돈의 맛! 그 불편한 진실”이란 특강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충발연은 2부 순서로 ‘행복, 선순환, 그리고 충청남도’라는 주제로 기념 세미나도 가졌다.

충발연 고승희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본 연구는 충남 도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라며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선정에 있어 충남 및 시·군 단위에서의 실현가능한 정책대상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수혜대상인 도민의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표의 최종 선정과정을 거친 후 실제 측정과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축적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충남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킬 수 있

는 합리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충남대 정선기 교수는 “행복지수 개발은 주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문제는 개발된 지표가 실제로 해당 주민의 ‘행복’, 즉 그들의 생활양식에 기초한 ‘행복’ 개념인가 하는 것이며, 특히 충남지역은 시·군별 생활문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주민의 생활양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일반지표’ 이외에 유형별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특수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발연 신동호 연구위원은 “충남 지역경제의 순환실태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란 신내생적 또는 내발적 발전론에서 지향하는 ‘지역 내 경제순환’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지역의 자족성과 자립성 확보를 의미”한다며 “충남의 지역경제를 생산-분배-소비로 분석해보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원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조달 비율이 낮고, 생산과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수도권 의존도가 높으며, 지역 외로 유출되

는 요소소득 비율은 높고, 지역내총생산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지역 내로 귀속되는 영업잉여는 성장률이 낮고, 지역의 경제환경이 제조업 중심으로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으로 소비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 내 기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기업의 본사를 지역 내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업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충남과 시·군정의 선도적인 연구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7년을 달려왔다.”면서 “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 충남도의회 김홍장 부의장과 김정숙 의원,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임승한 본부장 등 각계 기관장, 그리고 연구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충발연 개원17주년을 축하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올해 연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5월 29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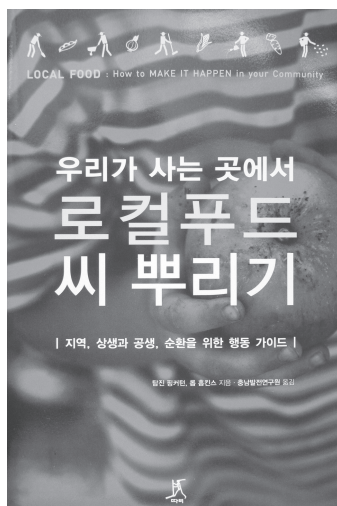
연구자문위원회는 충발연의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 그리고 연구원의 올바른 발전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써 활동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원은 각 분야별 1~2인씩 총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연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 연구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 「우리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뿌리기」 번역서 출간

충남발전연구원은 영국, 뉴질랜드 등 크고 작은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뿌리기’ (따비, 420쪽, 2만원)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의 두 저자인 영국의 토트네스에서 전환



운동을 시작한 ‘롭 홉킨스’와 초기부터 관여해온 ‘탐진 핑커턴’이 소개하고 있는 로컬푸드 프로젝트는 크게 12가지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하고 유통시킨 먹거리를 사

먹기만 했던 현대인이 다시 먹거리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조리하는 옛 기술을 익히는 것을 뜻하는 ‘재기능화’에서부터 석유 없는 세상을 물려받게 될 미래의 주역들이 먹거리를 매개로 땅과 공동체를 다시 만나게 하는 학교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이 소개하는 로컬푸드 프로젝트는 다양하다.

그렇다고 저자들이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거창하지도 않다. 단 일곱 가구가 진행해나가는 소박한 프로젝트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수백 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런던 해크니의 ‘지역공동체 키우기’ 등)도 한두 명의 아이디어와 부지런함, 그리고 열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저자들은 강조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책에서 로컬푸드 프로젝트의 유일한 방향이나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는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찬양하고,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의 행동을 고무”하고자 한다.

충발연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이 책은 영국에서 폴뿌리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와 먹거리의 전환을 통해 지역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꾀하는 전환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의 책을 옮긴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로컬푸드라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주는 현장실천 지침서.”라고 소개하면서 “충남도에서는 3농혁신정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련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로컬푸드 정책담당자나 지역운동가, 그리고 먹거리문제를 고민하는 농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등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을 조직하고 로컬푸드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di.re.kr